

국가회계 재지토계

ISSN 2635-7119

2021년 겨울호
Vol. 29



국가회계 동향

2021년 『국가회계편람』 발간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2021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Ⅲ),(Ⅳ)」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재정통계 동향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공익법인회계 동향

공익법인회계기준과
미국 비영리법인회계기준 비교

CONTENTS

2021년 겨울호

Vol. 29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재지토계

VOL. 29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1년 겨울호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편집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부소장
 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윤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전화 044-414-2265(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제작처 경성문화사

국가회계 동향

- 04 2021년 『국가회계편람』 발간
- 06 발생주의 활용사례 시리즈:
뉴질랜드 「투자보고서」 소개
- 16 국제공공부문 재무회계책임성지표 2020 소개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18 「2021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Ⅲ),(Ⅳ)」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 19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 21 2021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 22 국가회계이론교육 동영상 서비스 실시

재정통계 동향

- 24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 30 IMF 보고서: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데이터베이스
- 36 2021년 K-IFRS 기준서 제·개정



공익법인회계 동향

- 38 공익법인회계기준과 미국 비영리법인회계기준 비교
- 재무제표 표시 중심으로 -

세미나

- 62 제2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결과보고
87 '2021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결과보고
92 '탄소인자예산제도의 추진방향과 과제' 웹세미나

센터 동향

- 50 국가회계 네트워크 사업 최종보고회
56 2021년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사업 사업실적 평가
58 202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59 「공기업·준정부기관 교육사업 커리큘럼 개발」
위탁연구 최종보고

공지사항

- 107 국가회계재정통계 구독 안내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지통계



국가회계 동향



- 2021년 『국가회계편람』 발간
- 발생주의 활용사례 시리즈: 뉴질랜드 「투자보고서」 소개
- 국제공공부문 재무회계책임성지표 2020 소개

01 2021년 『국가회계편람』 발간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2020회계연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가회계편람』을 발간하였다.

『국가회계편람』은 국가회계 관련 법령 및 국가회계예규, 관련 실무해설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2014년에 처음 발간된 이래 국가회계기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다.

2021년 『국가회계편람』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 양식 일부 수정

국가 재정운영표 양식의 부처명(대통령비서실) 예시를 삭제하고, 범용적으로 중앙관서(A, B, C..) 등으로 변경하고, 순자산변동표 양식을 전기 및 당기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또한 이에 따라 국가회계예규 내 일부 재무제표 서식 및 용어가 정비되었다.

나. 예산편성지침과 『국가회계편람』 간 설명 및 용어 일치하도록 개정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의 벌금수익과 몰수금수익의 분류,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의 정의를 일부 개정하였다. 비용 회계처리지침에서는 이차보전비용과 특별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의 정의를 일부 개정하였다.

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도입으로 인한 개정

세입세출결산에 첨부되어야 하는 부속서류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가 추가되었다.

라. 세입·세출외거래의 범위에 정부보관금 추가

‘정부보관금 분류유형(기획재정부 국고과-1737 공문)’에 따라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상의 기타세입·세출외거래의 범위에 정부보관금이 추가되었다. 정부보관금의 분류체계와 회계처리가 신설되었으며, 정부보관금은 ① 공탁금 ② 보증금 ③ 압수·압류금 ④ 관리자미상금 ⑤ 기타 보관금 ⑥ 일시보유금 등으로 구분한다.

2021년 『국가회계편람』은 2022년 1월 배포될 예정이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1 2021년 『국가회계편람』의 주요 개정사항 및 관련 규정

구분	관련 규정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 양식 일부 수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서식)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예산편성지침과 『국가회계편람』 간 설명 및 용어 일치하도록 개정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문단7, 문단12) 「비용 회계처리지침」(문단12, 문단2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도입으로 인한 개정	「국가회계법 제15조의2」(① 7의2, 11의2, ② 2의2, ⑤)
퇴직수당미지급금 및 퇴직수당비용 계정 과목 신설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사항 반영	「연금 회계처리지침」(문단 39, 문단 3~6, 문단 26, 31, 34)
세입·세출외거래의 범위에 정부보관금 추가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문단6, 문단9, 문단10)

02 발생주의 활용사례 시리즈: 뉴질랜드 「투자보고서」 소개

뉴질랜드의 「투자보고서」는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사례 심층조사'를 주제로 진행된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의 2021 해외공동연구 참여국인 뉴질랜드의 재정위험 식별 및 자산·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소개되었다.

뉴질랜드 재무부가 2018년 3월 발간한 「투자보고서(Investment Statement)」는 정부의 재정상태표 관리 성과를 나타낸다. 부제목인 국민 복지를 위한 투자(Investing for Wellbeing)에서 나타나듯이 정부가 국민을 대신하여 학교, 병원, 금융자산 등에 투자한 내역을 주로 분석하며, 마지막 회계연도 말에 정부가 가진 자산·부채 포트폴리오의 상태와 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보고서」는 1989년 제정된 「공공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3년 개정을 통해 4년 주기로 작성되고 있다.

2018년 「투자보고서」는 제1장 재정상태표 관리, 제2장 정부 투자성과 평가, 제3장 멀리 내다보기, 제4장 분야별 성과 내역, 제5장 향후 과제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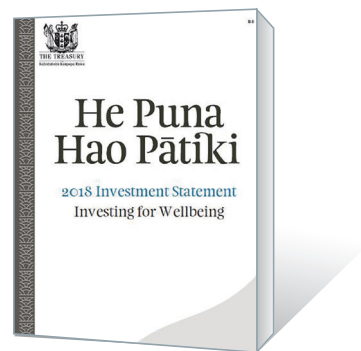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으며, 원문은 다음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18-03/is18-hphp-wellbeing.pdf>

가. 개요

1) 재정상태표 관리의 중요성

뉴질랜드 정부는 자국민을 대신하여 중요한 자산과 부채를 관리한다. 이러한 자산과 부채는 정부와 국민이 현재와 미래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되어 준다. 이러한 자산과 부채를 보여주는 것이 정부의 재정상태표이다. 현재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투입금액 대비 높은 가치(value for money)로 제공하고, 다음 세대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재정상태표 관리가 중요하다.

정부의 재정상태표는 장기적으로 복지를 뒷받침하는 4대 자본(인적, 사회적, 자연, 재무/실물 자본) 일부의 재무적 가치를 보여준다.

「투자보고서」는 정부의 재정상태표 관리현황과 재정상태표를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재무부의 생활표준체계(LSF, Living Standards Framework)를 이용하여 재정상태표 관리가 복지 강화로 확장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2) 재정상태표 현황

재정상태표의 규모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해 왔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3,140억달러 규모의 자산과 1,970억달러 규모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순자산은 1,170억달러이며, 이는 뉴질랜드 인구 1인당 2만 4천달러에 상응한다. 2022년까지 자산 규모는 3,650억달러, 부채는 2,050억달러, 그리고 순자산은 1,6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자산의 약 52%는 학교와 병원 등의 사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유형자산(사회활동 포트폴리오)이며, 30%는 사고보상과 퇴직연금 등 적립식 정부지출(재무활동 포트폴리오)이다. 18%는 영리 기업으로 구성된 이윤추구활동 포트폴리오가 차지한다.

대부분의 부채는 정부 운영자금에 필요한 일반 차입금이 차지한다. 그 밖에 주요 부채로는 보험금과 퇴직연금이다.

3) 재정상태표 관리 개선

① 경제적 위험의 관리

현재 정부의 재정상태표는 매우 탄탄(strong)하여 경제적 위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있다. 이는 더 나은 계획을 가능하게 하며 정부는 미래 정책에 있어 더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진다. 「투자보고서」에 제시된 스트레스 테스트는 정부의 재정 상태가 대규모 지진, 병충해 또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형태로 발생하는 크지만 가능성이 낮은 악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견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기치 않은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것 외에도 재정 회복력을 유지하려면 이미 직면한 장기적인 재정 압력(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인구 증가, 노령화, 도시화를 들 수 있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의 예상 수입과 지출에 비추어 재정상태표를 고려하면 재정 추세(예를 들어, 공공 의료비 지출)가 세대 간 어떤 영향을 줄지 더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재무부의 2016 장기 재정전망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향후 40년 동안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 예상된다. 지금의 작은 변경이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와 정부 재정상태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성격의 중장기적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덜 긴급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해수면 상승 가능성, 평균 기상 패턴의 변화, 극단적 기상 현상과 더불어 기후 변화가 있다. 끊임없는 기술의 변화는 일부 자산을 쓸모없게 만들기도 하지만 새로운 자산이 공공 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기회를 주곤 한다. 강건하고 탄력적인 재정상태표는 지속적이고 신중한 재정상태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실질적 문제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② 투자금액 대비 가치 향상 노력(Seeking value for money)

정부의 자산과 부채가 최상의 투자금액 대비 가치 향상(value for money)을 실현하는지 평가하려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선택 가능한 방식을 평가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소유하는 것은 한 형태일 뿐이며, 정부소유권은 외부로부터의 서비스 제공과 같은 대안과 엄격히 비교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자산을 소유하거나 부채가 발생하면 이를 잘 관리해야 하며 다양한 소유권 및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한

다. 「투자보고서」는 자본집약적 정부기관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성과를 평가한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사회활동 자산(social asset)이 노화되고 있다. 일례로 2만 5천호 이상의 공영주택과 38% 이상의 학교 건물이 지은 지 50년이 넘었다. 사회적 자산이 활기를 되찾음에 따라 그 구성 요소를 평가하여 변화하는 서비스 제공 모델을 제대로 지원하고 복지 지원에 대한 자산의 기여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자산의 성과 지표를 개선하고 복지 성과에 이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재정상태표상에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증가는 정부의 전반적인 위험 특성을 변화시킬 것이다. 현재의 위험 포지션을 분석해 보면 지리적으로 그리고 자산 종류별로 다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이한 위험 특성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정부는 주로 배당금을 통해 이윤추구 활동 포트폴리오로부터 수익을 실현하지만 배당수익률은 낮다. 배당수익률을 개선하거나 여타 수익 실현 옵션 확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정부의 투자 활동을 유도하는 정책 설정, 의사결정 권한 및 재무관리 설정은 세월이 흐르면서 훨씬 더 복잡해졌다. 이러한 조치가 목적적합하고 최상의 효과를 내는지 검토해야 한다.

4) 재정상태표 관리와 복지의 연계

정부의 재정상태표와 자산 관리를 통해 복지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다년간 지속되는 재무부의 과업이다. 앞에서 논의한 중점 영역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재무관리 분야의 핵심 과제이다. 재무부의 생활표준체계(Living Standards Framework, LSF)에 제시된 조직 원칙을 이용하여 재무부는 재정상태표 관리를 복지에 연계시키는 방식을 더욱더 확장할 계획이다.

복지는 주거, 소득, 고용, 지역 사회 참여, 환경 편의성(environmental amenity)¹⁾으로 인한 만족, 교육, 건강 및 보안을 포함하는 삶의 경험 중 유무형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런 측면은 4대 자본(자연, 사회적, 인적, 금융/실물 자본)을 통해 유지될 것이다. 자본의 대부분은 측정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전 과제는 근본적으로 복지 측정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측정 자체가 아닌, 복지의 모든 면을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증명된 고찰을 통해 기존의 증거 기반 정책 개발 도구(사회적 편익분석 등)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잡아야 한다. 우수한 측정 체제란 각 영역 내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관련 이론(즉 인과 모델)을 제시하고 그 모델을 데이터와 지표로 채우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도구가 되며 특정 복지 성과를 지원한 정부 활동의 역할과 기여도를 쉽게 분석하도록 해준다. 또한 정부의 투자, 재정상태표 관리 및 복지 개선을 위한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나. 재정상태표 관리

재정상태표 정보는 정부 활동의 비용을 평가하고 자원 사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데 유용하다. 또한 정부의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채권자에게도 유용하다.

‘소유’하는 것이 정부에 좋은 선택이 되는 경우

소유권은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형태에 불과하다. 소유하는 것을 선택하기 전에 다른 대안을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 물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소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소유권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비용을 초과한다.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산을 민간 부문이 지속적으로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 깨끗한 공기 또는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 또는 거주자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주거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 물품의 품질

- 계약을 통해서서는 위험을 민간 부문에 효율적으로 전가할 수 없다.
- 정부가 가장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 정부가 성과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가 군사 장비를 소유하고, 교육을 위한 민간 및 공공 학교 건물을 활용하며, 정부기관을 위해 건물을 임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재정상태표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올바른 자산 소유 및 관리: 사전에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을 배열하고 사후적으로 잘 관리하여 자산 가치를 최적화한다.
- 충격에 대한 공공 서비스의 회복력을 강화시키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 재정정책의 지속성과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을 유지한다.
- 정부 및 기관이 자산과 부채를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재정상태표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자산과 부채를 여러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어 분석과 논의가 용이하다. 각 재정상태표 계정과목의 주된 목적은 기능별로 분류하기 위함이다. 기능별 분류의 구체적인 설명은 <표2>와 같다.

표2 재정상태표 기능별 분류

사회활동 자산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한 자산과 부채. 여기에는 도로, 학교, 국립 공원이 포함된다. 본 보고서에서 사회적 자산에는 국세청(IRD)이 관리하는 미수 세금과 학자금 대출 그리고 국영연구기관과 같이 완전 비영리 목적의 국영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재무활동 자산	정부 지출과 미래 지출의무를 위해 조달 또는 적립되는 자산과 부채. 이 범주는 국립금융기관(CFI), 뉴질랜드 준비은행, 재무부의 국가부채관리청을 통한 정부 차입으로 구성된다.
이윤추구활동 자산	이윤추구 목적을 가진 주체들의 자산과 부채. 동 주체(기업)의 대부분은 경쟁적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이 범주는 이윤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영리회사')과 상장기업으로 구성된다.

출처: 뉴질랜드 재무부, 「2018 투자보고서 Investment Statement」, 2018.

정부 자산은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며, 현 자산 가치는 그때보다 2.5배 상승했다. GDP 대비 자산의 비율 역시 동 기간에 15%에서 30%로 증가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 세 가지 기능별 자산은 사회활동과 재무활동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기존의 사회, 재무 및 이윤추구 자산의 평가익을 반영한다.

총자산은 지금부터 2022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기간 말까지 3,6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사회활동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재투자에 더하여 현 정부는 '2018~2021 예산'에 126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이 중 100억달러는 핵심 공공 서비스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지금부터 2022년까지 지출될 전망이다. 재정상태표의 재무 및 이윤추구 부문의 자산은 자산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노령연금기금의 경우 정부의 분담금 재개로 증가할 것이다.

부채 역시 2005년에 810억달러에서 현재 1,970억달러로 증가했다. 부채의 증가 형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 정부의 재정 상태를 반영하면서 자산보다는 덜 안정적이었다. 2000년대 중반에는 강한 재정 흑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한 반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캔터베리 지진의 타격으로 인한 재정 적자로 인해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재정 건전화로 인해 부채액이 완만하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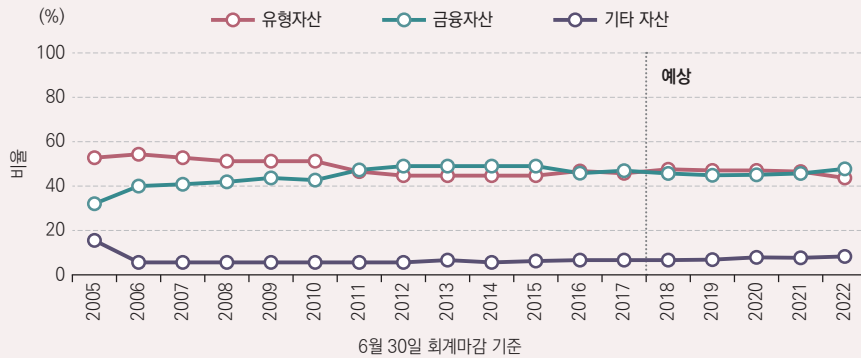
앞으로도 뉴질랜드는 「예산책임법」에 따라 정부 출범 5년 이내에 국가채무(정부의 핵심 순부채)를 GDP의 20% 수준으로 낮춰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채 증가율은 계속해서 완만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정부 재정상태표 구성요소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정부 재정상태표 구성요소의 변화

정부 재정상태표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주로 유형자산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사회적 자산에 비해 금융자산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림1 금융자산과 유형자산의 비율



출처: 뉴질랜드 재무부, 「2018 투자보고서 Investment Statement」, 2018.

다. 정부 투자 성과 분석

정부 투자 성과 분석을 위해서 공통적인 5가지 기준이 이용된다. 이 기준은 유효성, 효율, 지속가능성, 회복력, 적응력이다. 이 기준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경우 투자 성과 및 재정상태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표3>은 성과 기준, 각 기준과 관련된 질문, 성과 판단을 알릴 수 있는 지표의 예를 보여준다.

표3 5가지 성과 기준

성과 기준	성과 기준과 관련된 질문	지표 예시
유효성	해당 투자는 복지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선택된 것인가?	복지 성과, 기능, 상태, 서비스 만족도
효율	투입된 투자액을 감안할 때 그것이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활용도, 상태, 가용성, 잉여 자산, 운영 효율, 재무 수익, 자본 비용
지속가능성	현 정책 설정하에 예정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조달되는가?	예산 재무 지출, 재정여력 분석, 자금조달 및 자본구조, 예산 수익성, 수용력, 역량
회복력	해당 투자가 재정적 충격이나 자연 재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민감도 분석, 우연성의 적절성, 과거 충격에 대한 대응
적응력	투자는 기술, 인구 통계학적, 사회적, 기후 변화 등의 장기적 추세에 어느 정도까지 대응할 수 있는가?	개혁 프로그램, 시나리오 플래닝, 수요 계획, 자산의 유연성

출처: 뉴질랜드 재무부, 「2018 투자보고서 Investment Statement」, 2018.

라. 멀리 내다보기

생활표준체계(Living Standards Framework, LSF)는 국내외의 다양한 복지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뉴질랜드 고유의 프레임워크이다. 특히 복지에 대한 OECD의 접근 방식(OECD 국가의 복지에 대한 최신 평가인 OECD 2017 참조²⁾)을 기반으로 한다.

생활표준체계는 복지 성과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종합적으로 연결된 관점에서 정부 활동을 볼 수 있도록 정책 개발과 평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복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측면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재정상태표와 자산·부채 관리는 물론 환경, 사회, 기술적 추세, 정부의 활동(운영, 지출, 규제, 조달, 조세 등) 등 복지에 영향을 주는 인과모형의 개발과 관련된 최고 수준의 목표와 결과를 제공한다.



2) <https://www.oecd.org/newzealand/Better-Life-Initiative-country-note-New-Zealand.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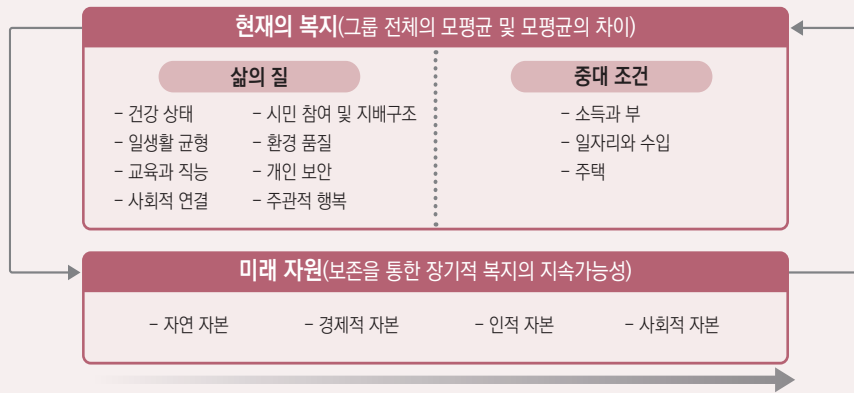
3) <http://www.treasury.govt.nz/abouttreasury/higherlivingstandards>

생활표준체계(Living Standards Framework, LSF)

재무부는 복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생활수준’이라는 접근 방식을 개발해 왔다. 생활표준체계는 정부 기관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생활표준체계에 따르면 현재 초점은 마오리족 문화, 문화적 정체성의 다른 측면들, 정신건강, 자원봉사 및 부패에 대한 조치 등 뉴질랜드 고유의 상황과 가치를 감안하여 OECD의 복지 프레임워크를 보강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재무부 복지 프레임워크’³⁾에 논의되어 있다.

뉴질랜드 정책 결정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조정하는 것이 물론 최우선적 목표이지만 투명성과 이웃 국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OECD의 프레임워크는 [그림2]와 같으며, 이는 생활표준체계에서 활용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림2 OECD 복지 프레임워크



출처: OECD, 「삶의 질: 복지의 측정」, 2015.

프레임워크의 핵심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현재의 복지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 복지(지출)를 위해 사용되는 4가지 자본
- 다양한 자본과 복지 지출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03 국제공공부문 재무회계책임성지표 2020 소개

IFAC(국제회계사연맹)과 CIPFA(공공부문의회계사협회)는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 세계 165개국(2018년 150개국 대비 16개국 추가)을 대상으로 발생주의 도입 현황을 조사하여 2021년 6월에 「국제공공부문 재무회계책임성지표 2020」를 공개했다.⁴⁾ 재무회계책임성지표는 ① 발생주의 적용 현황 ②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IPSAS) 적용 현황 ③ 2025 전망 ④ 공공부문 재무보고의 국제동향 등에 대한 설문결과를 제공한다.

2020년 현재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 30%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에 비해 6% 증가하였다. 부분적으로 발생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포함하면 115개국으로 70%에 달한다. 발생주의 재무보고 적용국가 중 57%는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향후 발생주의로의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 2025년에는 83개국(전 세계 50%)에서 발생주의 재무보고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회계기준으로 IPSAS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조사되어 그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지표가 전 세계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추이와 회계기준의 적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공공부문 재무회계책임성지표 2020」 국문자료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⁵⁾ 원문과 상세한 국가별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다.⁶⁾

4) 모든 저작권은 IFAC과 CIPFA에 있으며, 재생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사용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본 현황보고서의 국문번역 및 발간을 위한 저작권 사용을 승인받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제공공부문 재무회계책임성지표 2020의 현황보고서」의 소개를 목적으로 원문을 충실히 국문화하여 수록하였다.

5) (국문자료) https://www.kipf.re.kr/gafsc/Trend/accounting_AccountingTrend/kiTrend/Domestic/AA/view.do?serialNo=5602

6) (원문 및 국가별 상세정보) <https://www.ifac.org/knowledge-gateway/supporting-international-standards/discussion/international-public-sector-financial-accountability-index-2020>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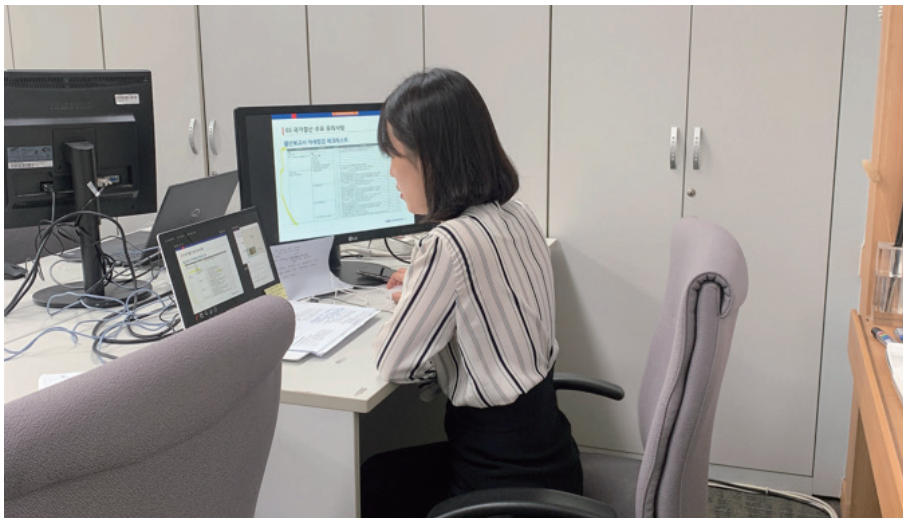
- 「2021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Ⅲ),(Ⅳ)」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 2021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 국가회계이론교육 동영상 서비스 실시

01 「2021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Ⅲ),(Ⅳ)」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기획재정부는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앞두고 「2021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Ⅲ),(Ⅳ)」을 발간하였다. 「2021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Ⅲ),(Ⅳ)」은 국가결산 개설, 결산 보고서 작성양식, 디브레인(dBrain)을 통한 결산서 작성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결산 주요 변동 및 유의사항 등 각 회계·기금 및 중앙관서 결산 담당자들이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중앙관서 결산교육을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해당 교육영상은 2021년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획재정부 e-재정배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이버교육으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관서 결산교육에서는 결산담당자들에게 국가결산 주요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으로 결산보고서 제출 일정과 『국가회계편람』 수정사항 및 2020회계연도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전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 중앙관서 결산교육(11. 15.), KMAC 마포 비즈니스스쿨 교육장

02 2021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2021년도 국가회계전문교육’이 지난 6월 23일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총 13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본 교육은 기획재정부 주최로 회계 관계 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으며, 2018년도부터는 안정적인 교육 관리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교육을 주관하였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진행하여 교육생들은 일정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교육을 수강할 수 있었다.

국가회계전문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으로 총 4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생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과정을 직접 신청하여 들을 수 있게 진행하였다. 특히 10월에는 재무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결산실무 과정이 2회(회당 2일간) 실시되었다. 본 과정은 국가 재무결산의 이해, 2021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감사원 지적사례, 내부거래실무, 결산 조정분개, 결산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2차 재무결산실무 교육(실시간 온라인, 10. 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8층 중회의실

올해 국가회계전문교육 수행 결과, 13회차에 걸쳐 총 1,250명(전년도 1,439명)의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5점 척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만족도는 4.50점(전년도 4.42), 강사 만족도는 4.53점(전년도 4.47), 온라인 교육 시스템 만족도는 4.46점(전년도 교육환경 만족도 4.40)으로 방송 송출을 위한 장비 등을 보강하고, 비대면 교육에 적합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체적인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다음 해에도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과정 안내 및 교육 신청에 관한 사항은 2022년 5월부터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https://www.kipf.re.kr/edu/>)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2021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기획재정부는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21년 일선관서 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2021년 일선관서 결산교육’은 올해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일선관서 결산업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3,415명의 결산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정부결산 작성지침, 재무결산 오류사례, 국유재산 결산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재무결산 오류사례 강의를 통해 국유재산 관련 디브레인 (dBrain) 업무 처리 시 발생하기 쉬운 재무결산 오류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교육하여 향후 일선관서 업무 담당자들이 관련 오류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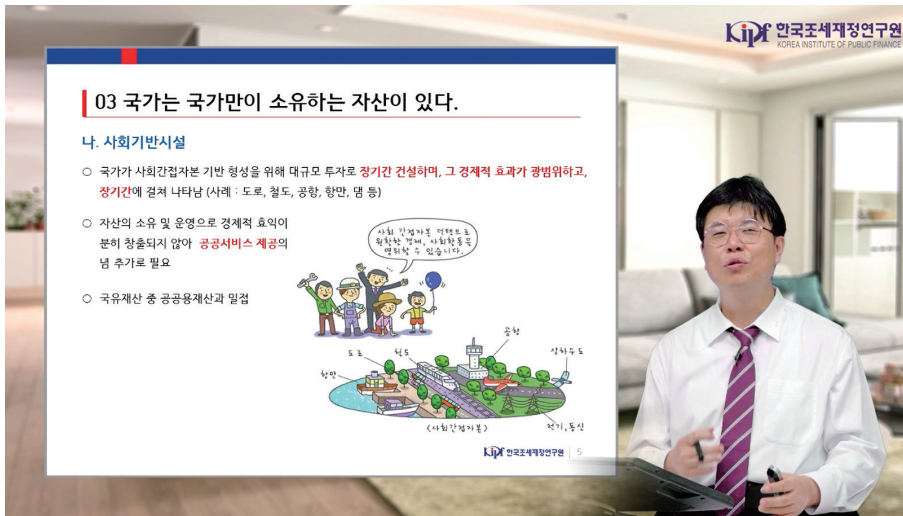
2021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12차시(11. 19.), KMAC 마포 비즈니스스쿨 교육장

04 국가회계이론교육 동영상 서비스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전문교육이 없는 기간 중에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국가회계교육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회계이론교육 중 일부를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가회계이론 기초’라는 명칭으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국가재무정보 기초사례 연습, 세입세출 거래와 복식부기, 결산조정과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특성, 국가회계법령의 이해로 구성되었으며, 국가회계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기초 과정으로 제작되었다.

또한 교육생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하여 총 10개 차수가 개당 30분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 본인이 수강을 희망할 때, 원하는 과정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해당 과정은 국가회계전문교육 홈페이지(<https://www.kipf.re.kr/edu/>) 내, 사이버교육영상 메뉴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 과정을 수강한 뒤에는 보다 상세한 교육 내용이 포함된 국가회계전문교육 본 과정에 참여하기를 권한다.



국가회계이론 기초 온라인 교육 화면



재정통계 동향



-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 IMF 보고서: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데이터베이스
- 2021년 K-IFRS 기준서 제·개정

01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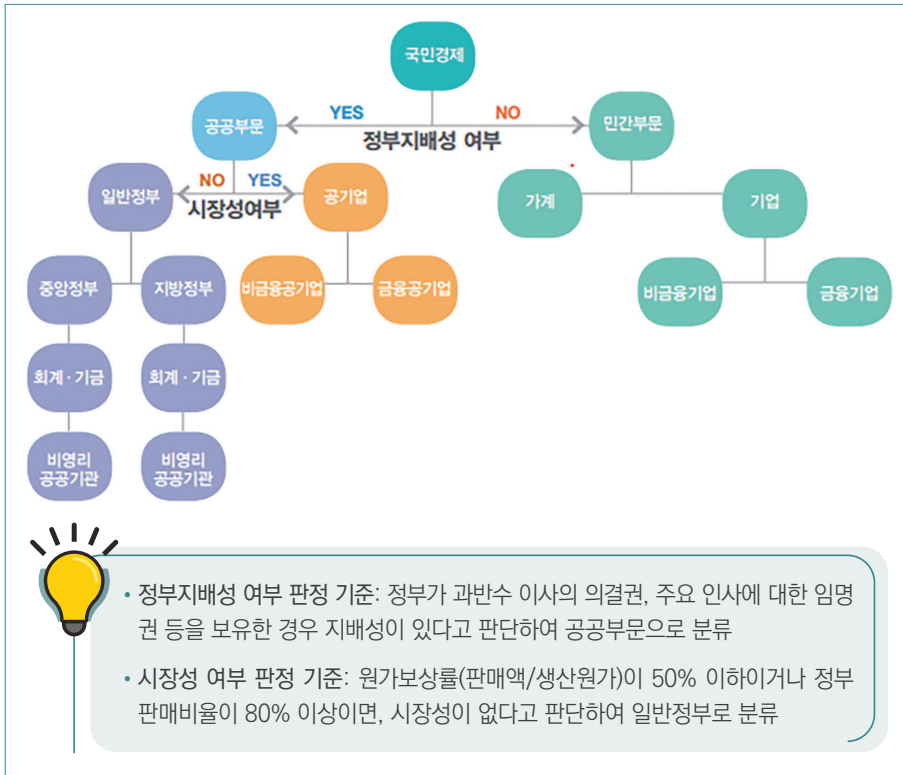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2021년 12월 16일(목)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2020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를 산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D1)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를 다음 해 12월에 산출·공개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를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산출 범위

1) 포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정부의 지배성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공공부문 포괄 범위를 설정한 후, 시장성 여부를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1 공공부문 Decision tree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알기쉬운 재정통계』, 2021.

2020회계연도 공공부문 포괄 범위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공단, 공영방송사, 국립대학법인 등을 포함하여 총 496개 기관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 중 시장성이 없는 323개 기관은 정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일반정부(비영리공공기관)로, 시장성이 있는 173개 기관은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 부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부채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상품으로 정의한다. 한편 채무상품은 채무증권, 차입금, 기타 미지급 등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나. 공공부문 부채통계 현황

2020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는 1,280.0조원(GDP 대비 66.2%)으로 전년(1,132.6조원) 대비 147.4조원(GDP 대비 7.3%p) 증가하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945.1조원(GDP 대비 48.9%)으로, 전년(810.7조원) 대비 134.4조원, GDP 대비로는 6.8%p 증가하였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8.1조원(GDP 대비 21.1%)으로 전년(395.8조원) 대비 12.3조원 증가하였고, GDP 대비 0.5%p 증가하였다.

다. 공공부문 부채 부문별 증감 분석

1) 일반정부 부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부채가 각각 130.8조원 및 8.1조원 증가하였고, 중앙-지방 간 내부거래는 증가(4.5조원)하여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 대비 134.4조원 증가한 945.1조원(GDP 대비 48.9%)이고 GDP 대비로는 6.8%p 증가하였다.

(단위: 조원, %, %p)

	2019년(A)		2020년(B)		증감(B-A)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증감액	증감률
◇ 일반정부 부채	810.7	42.1	945.1	48.9	134.4	6.8
① 중앙정부	767.6	39.9	898.4	46.5	130.8	6.6
- 국가 회계·기금	730.5	38.0	857.7	44.4	127.2	6.4
- 국가 비영리기관	50.4	2.6	53.7	2.8	3.3	0.2
- 내부거래	△13.2	△0.7	△13.0	△0.7	0.3	0.0
② 지방정부	54.9	2.9	63.0	3.3	8.1	0.4
- 지방 회계·기금	54.8	2.8	63.2	3.3	8.4	0.5
· 지방자치단체	47.6	2.5	56.6	2.9	9.1	0.4
· 교육자치단체	7.2	0.4	6.6	0.3	△0.7	△0.1
- 지방 비영리기관	0.9	0.0	1.0	0.1	0.0	0.1
- 내부거래	△0.8	0.0	△1.2	△0.1	△0.3	△0.1
③ 내부거래	△11.8	△0.6	△16.2	△0.8	△4.5	△0.2

출처: 기획재정부,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1. 12. 16.

가) 중앙정부 부채

2020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부채는 전년 767.6조원(GDP 대비 39.9%) 대비 130.8조원이 증가한 898.4조원(GDP 대비 46.5%)으로 산출되었다.

(단위: 조원, %, %p)

구분	2019년(A)		2020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 중앙정부	767.6	39.9	898.4	46.5	130.8	6.6
▪ 회계·기금	730.5	38.0	857.7	44.4	127.2	6.4
▪ 비영리기관	50.4	2.6	53.7	2.8	3.3	0.2
▪ 내부거래	△13.2	△0.7	△13.0	△0.7	0.3	0.0

출처: 기획재정부,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1. 12. 16.

(1) 중앙회계·기금

2020회계연도의 중앙회계·기금은 전년 730.5조원(GDP 대비 38.0%) 대비 127.2조원이 증가한 857.7조원(GDP 대비 44.4%)으로 산출되었다.

(채무증권)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가 113.2조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거래 활성화 등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전년 대비 2.5조원 증가하였다.

(단위: 조원)

구분	2019년(A)	2020년(B)	증감(B-A)
◆ 국채	701.4	818.4	117.0
▪ 국고채	616.8	730	113.2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8.2	9.5	1.3
▪ 국민주택채권	76.4	78.9	2.5
◆ 공채	18.2	18.9	0.7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9	1.5	△2.4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4.4	17.5	3.1
◆ 자기 국·공채	(116.6)	(122.4)	(5.8)

출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2020회계연도 기금 재무제표」, 2021.

(차입금)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금액 및 BTL 미지급금이 전년 대비 각각 11.1조원 증가, 0.1조원 감소하였다.

(2) 비영리공공기관

2020 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은 전년 50.4조원(GDP 대비 2.6%) 대비 3.3조원이 증가한 53.7조원(GDP 대비 2.8%)으로 산출되었다.

나) 지방정부 부채

2020 회계연도의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 54.9조원(GDP 대비 2.9%) 대비 8.1조원이 증가한 63.0조원(GDP 대비 3.3%)으로 산출되었다.

(단위: 조원, %, %p)

구분	2019년(A)		2020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 지방정부 부채	54.9	2.9	63.0	3.3	8.1	0.4
▪ 회계·기금	54.8	2.8	63.2	3.3	8.4	0.4
▪ 비영리기관	0.9	0.0	1.0	0.1	0.0	0.1
▪ 내부거래	△0.8	0.0	△1.2	△0.1	△0.3	△0.1

출처: 기획재정부,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1. 12. 16.

(1) 지방회계·기금

2020회계연도의 지방회계·기금은 전년 54.8조원(GDP 대비 2.8%) 대비 8.4조원이 증가한 63.2조원(GDP 대비 3.3%)으로 산출되었으며,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가) 자치단체

전년 47.6조원 대비 9.1조원 증가한 56.6조원으로, 자치단체별 증감을 살펴보면 서울(4.3조원), 광주·경남·부산·대구(0.6조원) 등이 증가하였다.

(나) 교육자치단체

전년 7.2조원 대비 0.7조원 감소한 6.6조원으로 장·단기차입금 및 금융리스부채 등이 줄어들어 감소하였다.

(2) 비영리공공기관

전년 0.9조원 대비 400억원 증가한 1.0조원으로 증감내역에서의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 395.8조원(GDP 대비 20.6%) 대비 12.3조원 증가한 408.1조원(GDP 대비 21.1%)으로 집계되었다. 중앙(9.8조원) 및 지방(2.5조원)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모두 증가하였다.

중앙 비금융공기업은 토지주택공사(3.6조원), 한전·발전자회사(3.2조원) 등의 부채가 9.8조원 증가하였다. 지방 비금융공기업은 SH공사(1.3조원), 서울교통공사(0.9조원) 등의 부채가 전년 대비 2.5조원 증가하였다.

3) 추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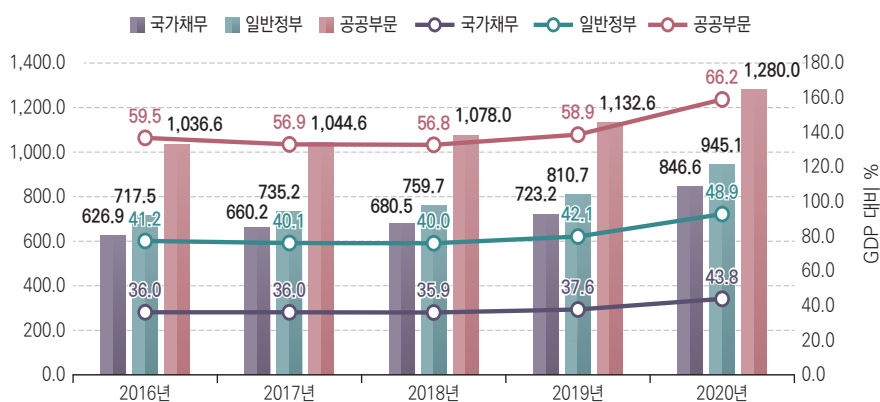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비율*의 경우, 그 증가 추이가 점차 감소하다 2019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중앙회계기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하였다.

* 부채 유형별 GDP 대비 비율 증감

- 국가채무 (D1): (2016년) 0.3%p → (2017년) 0.1%p → (2018년) △0.0%p → (2019년) 1.7%p → (2020년) 6.2%p
- 일반정부부채(D2): (2016년) 0.4%p → (2017년) △1.1%p → (2018년) △0.1%p → (2019년) 2.1%p → (2020년) 6.8%p
- 공공부문부채(D3): (2016년) △1.0%p → (2017년) △2.6%p → (2018년) △0.1%p → (2019년) 2.1%p → (2020년) 7.3%p

그림2 부채 유형(D1, D2, D3)에 따른 연도별 추이

(단위: 조원, GDP 대비 %)



출처: 기획재정부,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1. 12. 16. 및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vol. 94, 2021. 11. 7. 참고해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02 IMF 보고서: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데이터베이스

본 자료는 2020년 6월에 발표한 ‘IMF Working Paper – Public Sector Balance Sheet Database Overview and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이다.

공공부문⁷⁾ 대차대조표(Public Sector Balance Sheet, 이하 PSBS)는 공공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PSBS 데이터베이스에서는 38개국 정부의 공기업, 천연자원, 연금부채 등까지 고려한 전체적인 자산 및 부채 통계를 제시한다.

PSBS는 정부 재정상태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자산수익률은 제고하고 관련 위험은 낮춤으로써 재정정책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가. PSBS 데이터베이스 포괄범위

PSBS 데이터베이스는 총 75개 국가에 대한 연간 기준의 대차대조표를 제공한다. 공공부문 기준으로 데이터를 산출하는 국가는 38개국으로 선진국(15개), 신흥시장국(17개), 저소득 개발도상국(6개)으로 구성되며, 일반정부 기준으로 30개국, 중앙정부 기준으로는 7개국에 대한 대차대조표 정보를 제공한다.



7) 국제기준상 공공부문은 정부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관으로 구성되며, 시장성 여부에 따라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표1 PSBS 데이터베이스 포괄범위

데이터베이스 구성 단위	국가 유형	국가
공공부문 (38개국)	선진국	한국, 미국, 독일, 노르웨이,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신흥시장국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 등
	저소득 개발도상국	케냐,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등
일반정부 (30개국)	선진국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등
	신흥시장국	중국, 헝가리, 폴란드, 우루과이 등
	저소득 개발도상국	부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정부 (7개국)	선진국	-
	신흥시장국	세르비아, 팔라우, 바베이도스 등
	저소득 개발도상국	말라위, 솔로몬제도 등

출처: IMF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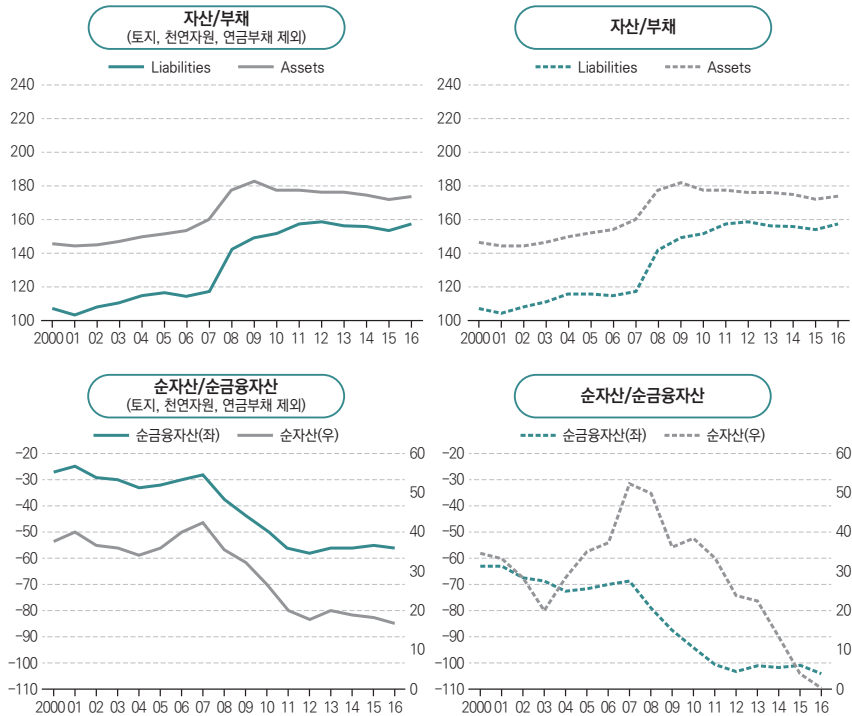
나. 17개국 순자산 및 순금융자산 추세

공공부문의 자산과 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반면 순자산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7년에서 2009년까지 토지와 천연자원을 제외한 자산이 GDP 대비 22%p 증가하며 공공부문 자산이 크게 확대됐는데, 이는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 및 개입에 따른 영향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공공부문 자산은 점차 감소하여 GDP 대비 14%p 증가한 수준으로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높은 수치를 유지 중이다.

공공부문의 순자산은 재정적자가 일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공공부문 순금융자산은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GDP 대비 -28%p에 해당하는 11조달러만큼 규모가 감소하였고 이후 몇 년 동안 감소세가 유지되어 왔다. 한편 순자산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GDP 대비 -25%p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2000~2016년 공공부문 대차대조표

(단위: GDP 대비 %)



출처: IMF staff estim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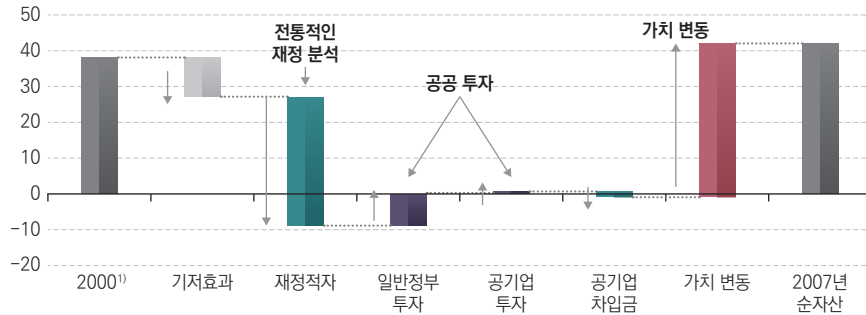
공공부문 순자산의 변동원인을 살펴보고자 글로벌 금융위기(2007년)를 기준으로 순자산 변화에 영향을 미친 재정적자, 공공투자, 가치변동 등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금융위기 이전 17개국의 공공부문 시계열 자료를 살펴보면 공공부문 순자산은 2000년 GDP 대비 38%에서 2007년 GDP 대비 42%로 4%p 증가하였다. 순자산 변동은 누적된 재정적자, 공공투자(일반정부 및 공기업), 가치변동(자산평가) 등에 따라 발생하였다.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누적된 재정적자가 GDP 대비 -36%로 매우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41%에 달하는 (+) 가치변동(자산평가 등에 따라 가치 증가) 영향과 GDP 대비 7%를 차지하는 공공투자 증가에 따라 총 순자산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자산에 대한 가치변동 (+) 효과가 재정적자에 따른 순자산의 (-) 효과를 상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4 2000~2007년 순자산 변화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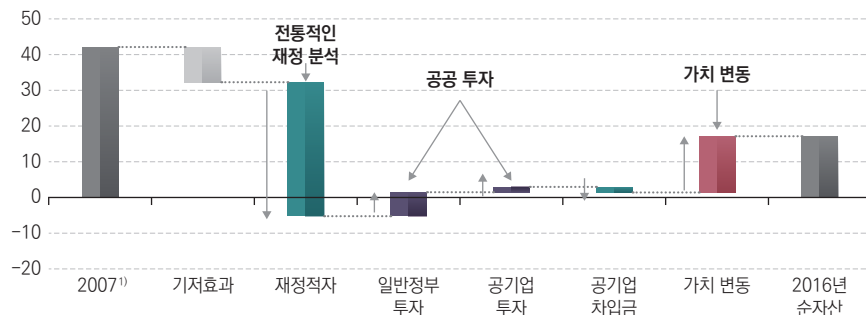
주: 1) 2000년 GDP 대비 비율로 나타냄

출처: IMF staff estimates

금융위기 이후 순자산은 2007년 GDP 대비 42%에서 2016년 17%로 25%p 감소하였다. 순자산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누적된 재정적자로 GDP 대비 -38%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재정적자 중 일부는 정부소비가 아닌 공공투자에 사용되어 GDP 대비 8% 순자산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금융위기 직후 자산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지만, 이후 자산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GDP 대비 16%p 증가해서 순자산 감소폭이 일부 상쇄되었다.⁸⁾

그림5 2007~2016년 순자산 변화 분석

(단위: GDP 대비 %)



주: 1) 2007년 GDP 비율로 나타냄

출처: IMF staff estimates

8) 금융위기 이전 및 이후 순자산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항은 가치 변동에 따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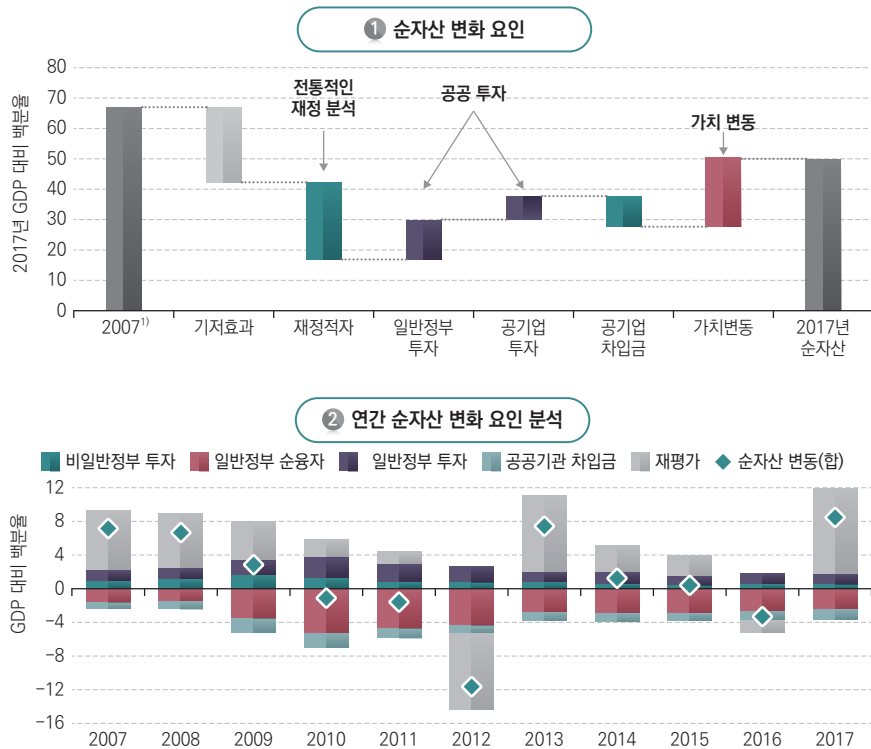
다. 단일국가 분석 예시: 호주

호주의 PSBS 분석은 대차대조표 접근법을 통해 알 수 있는 유량(flow) 및 저량(stock) 통합분석의 좋은 예시가 된다. 호주에서는 지난 10년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GDP 대비 25%를 기록하였고, 공공투자를 통해 GDP 대비 20% 수준의 자산을 창출했는데 이 중 3분의 1은 일반정부에 포함되지 않는 공기업이 주도하였다. 또한 가치 변동으로 인해 순자산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순자산은 GDP 대비 17%p 감소했으며, 이는 누적된 재정적자에 따른 순자산 감소를 가치 변동 증가분이 일부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간 순자산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재정적자, 공공투자, 가치변동 등에 따른 순자산의 변동 및 추이를 분석할 수 있어 이를 통해 공공부문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이슈 파악 및 재정정책의 투명한 관리 및 재정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6 호주: 공공부문 순자산(2007~2017년)

(단위: GDP 대비 %)



주: 1) 2017년 GDP 대비 비율로 나타냄
출처: 호주 통계청 및 IMF staff estimates

라. 재정분석에서 PSBS의 사용

1) 국가 간 분석

공공부문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38개국의 자산평균은 GDP 대비 218%인 반면 부채는 GDP 대비 196% 수준이다. 순자산은 평균적으로 양(+)을 기록했으나 국가마다 차이가 발생한다. G7 국가들은 캐나다를 제외하고 대부분 순자산이 음(-)이며 천연자원의 가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자산이 많아 순자산이 양(+)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또한 PSBS에는 일반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포괄함에 따라 금융공기업과 비금융공기업의 자산과 부채 등 정부가 관리하는 재정의 전체 규모를 보여준다. 또한 대차대조표 전반에 걸친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재정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2) 적용범위 세분화를 통한 국가 간 분석 확대

공공부문의 포괄범위 및 자산 및 부채 범위를 좁히면 국가 간 분석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 천연자원 및 연금부채를 제외한 일반정부 '기본 대차대조표'는 상당히 많은 국가와 지역에 걸쳐 비교가 가능하다. PSBS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공공부문을 다룰 때보다 세부사항을 쉽게 집계할 수 있는 정부범위(일반정부) 또는 자산 및 부채로 범위를 한정해서 분석하는 경우 국가 간 분석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다.



03 2021년 K-IFRS 기준서 제·개정

1) K-IFRS 기준서 제·개정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결산을 수행하며, 회계사무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K-IFRS의 제·개정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에 영향을 미친다.

2) 2021년 주요 K-IFRS 기준서 제·개정 내용

기준서	제·개정 주요 내용
제1116호 리스 개정	(개정 사유)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임차료 할인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개정 (주요 내용)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임차료 할인 등이 발생한 경우, 리스변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 (적용 조건) 변경 후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작으며,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주며,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함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	(개정 사유) 이자율지표 개혁 완료 이후 대체 지표 이자율이 확정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의 회계처리 이슈 해결을 위해 개정 (주요 내용) 이자율 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요건 충족 시 위험회피회계를 유지, 경제적 실질의 변경이 없는 경우 금융상품 재측정에 따른 손익인식방지(상각후원가 측정), 리스변경에 따른 실무적 부담 경감 규정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개정 공표」, 보도자료, 2020. 7. 8.
한국회계기준원, 「이자율지표 개혁」 관련 K-IFRS 개정(2단계) 공표, 보도자료, 2021. 3. 8.

3) 제·개정 K-IFRS 기준서 영향

2021년부터 적용하는 제·개정된 K-IFRS 기준서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된 K-IFRS가 적용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주석에 개정효과와 관련한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공익법인회계 동향



- 공익법인회계기준과 미국 비영리법인회계기준 비교
- 재무제표 표시 중심으로 -

01 공익법인회계기준과 미국 비영리법인회계기준 비교 -재무제표 표시 중심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기획재정부 고시 「공익법인회계기준」과 미국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인 FASB(재무회계위원회) 「ASC⁹⁾ 958 Not-for-Profit Entities」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US GAAP상 비영리법인회계기준은 영리기업회계기준에 추가되는 특정 산업기준의 하나(ASC 958)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가회계 재정통계』에서는 ASC 958 중에서 205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210 Balance Sheet, 220 Income Statement-Reporting Comprehensive Income 주제와 우리나라의 공익법인회계기준상 재무제표 종류 및 표시,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에 대해 분석하였다.

9) 미국 FASB에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기존에 흩어져 있던 조문 등을 하나의 기준서로 통일한 ASC(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를 발효

1) 재무제표 종류 및 표시

① 재무제표 종류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주식으로 재무제표가 구성되고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비용과 노력을 경감하기 위해 현금흐름표는 제외되었다. 미국의 비영리법인회계기준의 경우 재무상태표, 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 및 주식으로 재무제표가 구성되어 있다.

재무상태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의 운영성과표와 미국의 운영보고서의 경우 성격 및 양식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1 재무제표 주요 차이

우리나라	미국
·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 운영보고서 (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 융합)
-	· 현금흐름표
· 주식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 포함)	· 주식

출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② 비교재무제표

우리나라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제9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에 따라 전기와 당기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미국의 비영리법인회계기준은 비교 재무제표를 권장하지만 요구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비영리법인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례도 있으며, 일부는 당기 재무제표만 작성한 사례가 있었다.

표2 비교재무제표 주요 차이

우리나라	미국
· 비교재무제표 작성 의무	· 비교재무제표 작성 권장, 의무 아님

출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③ 비용의 기능별·성격별 분류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경우 운영성과표상 비용은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등 기능별로 표시하고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성격별로 운영성과표 본문 또는 주석에 표시하고 있다.

미국 비영리법인회계기준의 경우 운영보고서상 비용은 성격별·기능별 분류 또는 두 가지 형태로 표시 가능하며 성격과 기능에 따른 비용보고는 재무제표와는 분리하여 '재무제표 주석의 비용명세표' 또는 '별도의 재무제표'로 보고해야 한다.

표3 비용의 기능별·성격별 분류 주요 차이점

우리나라	미국
· 비용을 운영성과표에 기능별로 표시	· 비용을 운영보고서에 기능별 또는 성격별 표시 가능
· 성격별 비용을 주석에 표시 또는 운영성과표 기능별 비용과 함께 성격별 비용 표시 가능	· 기능별 비용명세서를 재무제표 주석 또는 별도의 재무제표로 표시 가능

출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2) 재무상태표

① 재무상태표 예시

표4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재무상태표 예시

공익법인명	재무상태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과목	당기			전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산						
유동자산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단기투자자산	×××	×××	×××	×××	×××	×××
매출채권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재고자산	×××	×××	×××	×××	×××	×××
비유동자산	×××	×××	×××	×××	×××	×××

표4 의 계속

과목	당기			전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투자자산	×××	×××	×××	×××	×××	×××
장기성예적금	×××	×××	×××	×××	×××	×××
장기대여금	×××	×××	×××	×××	×××	×××
유형자산	×××	×××	×××	×××	×××	×××
토지	×××	×××	×××	×××	×××	×××
건물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무형자산	×××	×××	×××	×××	×××	×××
지식재산권	×××	×××	×××	×××	×××	×××
개발비	×××	×××	×××	×××	×××	×××
기타비유동자산	×××	×××	×××	×××	×××	×××
임차보증금	×××	×××	×××	×××	×××	×××
장기선급비용	×××	×××	×××	×××	×××	×××
자산총계	×××	×××	×××	×××	×××	×××
부채						
유동부채	×××	×××	×××	×××	×××	×××
단기차입금	×××	×××	×××	×××	×××	×××
매입채무	×××	×××	×××	×××	×××	×××
미지급비용	×××	×××	×××	×××	×××	×××
비유동부채	×××	×××	×××	×××	×××	×××
장기차입금	×××	×××	×××	×××	×××	×××
임대보증금	×××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	×××	×××	×××	×××	×××
(-) 퇴직연금운용자산	(×××	(×××	(×××	(×××	(×××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	×××	×××	×××	×××	×××
부채총계	×××	×××	×××	×××	×××	×××
순자산						
기본순자산	×××	×××	×××	×××	×××	×××
보통순자산	×××	×××	×××	×××	×××	×××
적립금	×××	×××	×××	×××	×××	×××
잉여금	×××	×××	×××	×××	×××	×××
순자산조정	×××	×××	×××	×××	×××	×××
순자산총계	×××	×××	×××	×××	×××	×××
부채 및 순자산 총계	×××	×××	×××	×××	×××	×××

출처: 공익법인회계기준 [서식1] 재무상태표

표5 미국 비영리법인회계기준 재무상태표 예시

A 비영리단체
재무상태표
20X1년과 20X0년 6월 30일

(단위: 1천달러)

자산:	20X1	20X0
현금 및 현금성자산	4,575	4,96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130	1,670
재고자산 및 선급비용	610	1,000
미수 기부금	3,025	2,700
단기투자	1,400	1,000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제한된 자산	5,210	4,560
유형자산(토지, 건물, 장비)	61,700	63,590
장기투자	218,070	203,500
자산총계	296,720	282,980
부채와 순자산:		
부채:		
매입채무	2,570	1,050
환불가능 선수금		650
미지급 보조금(or 보조금 부채)	875	1,300
지급어음		1,140
연금신탁부채	1,685	1,700
장기부채	5,500	6,500
부채총계	10,630	12,340
순자산:		
기부자제약 없는 순자산(Note DD)	92,600	84,570
기부자제약 있는 순자산(Note B)	193,490	186,070
순자산총계	286,090	270,640
부채와 순자산총계:	296,720	282,980

출처: ASC-958-205-55-9 예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번역

② 구분회계

우리나라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경우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 표시하는 반면, 미국의 비영리법인회계기준의 경우 사업부문에 따른 구분이 없다.

표6 구분회계 주요 차이점

우리나라	미국
·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 구분	· 사업부문에 따른 구분 없음

출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③ 순자산의 구분

우리나라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경우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순자산을 구분하며,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기본순자산으로 구분한다. 보통순자산은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을 의미하며, 순자산 조정은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을 포함한다.

미국의 비영리법인회계기준에서는 순자산을 기부자제약 있는 순자산, 기부자제약 없는 순자산으로 구분하며, 미국의 기부자제약은 일시적인 제약과 영구적인 제약 모두를 포함한다. 기부자제약이 해제된 순자산이 있는 경우 기부자제약 없는 순자산으로 운영보고서에 금액 및 제약이 해제된 사유 등을 표시하고 있다.

표7 순자산의 구분 주요 차이점

우리나라	미국
·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 기부자제약 있는 순자산, 기부자제약 없는 순자산으로 구분

출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④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 정보

우리나라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경우 자산과 부채를 각각 유동·비유동자산, 유동·비유동부채로 구분하고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미국의 비영리법인회계기준에서는 유동·비유동 구분 없이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 자산 및 부채의 유동성 또는 만기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유동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8 자산과 부채 유동성 정보 주요 차이점

우리나라	미국
·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고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울	·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유동성에 대한 정보 제공

3) 운영성과표(운영보고서)

① 운영성과표(운영보고서) 예시

표9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운영성과표 예시

운 영 성 과 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단위: 원)

공익법인명	당기			전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사업수익	×××	×××	×××	×××	×××	×××
기부금수익	×××	×××	-	×××	×××	-
보조금수익	×××	×××	-	×××	×××	-
회비수익	×××	×××	-	×××	×××	-
투자자산수익	×××	×××	-	×××	×××	-
매출액	×××	×××	-	×××	×××	-
사업비용	×××	×××	×××	×××	×××	×××
사업수행비용	×××	×××	-	×××	×××	-
○사업수행비용	×××	×××	-	×××	×××	-
△△사업수행비용	×××	×××	-	×××	×××	-
.....	×××	×××	-	×××	×××	-
일반관리비용	×××	×××	-	×××	×××	-
모금비용	×××	×××	-	×××	×××	-
.....	×××	-	×××	×××	-	×××
사업이익(손실)	×××	×××	×××	×××	×××	×××
사업외수익	×××	×××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	×××	×××	×××	×××
전기오류수정이익	×××	×××	×××	×××	×××	×××

표9 의 계속

과목	당기			전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사업외비용	×××	×××	×××	×××	×××	×××
기타의 대손상각비	×××	×××	×××	×××	×××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
유형자산재평가손실	×××	×××	×××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	×××	×××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	×××	×××	×××	×××	×××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환입액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
법인세비용	×××	×××	×××	×××	×××	×××
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

출처: 공익법인회계기준 [서식2] 운영성과표

표10 미국 비영리법인회계기준 운영보고서 예시

A 비영리단체
운영보고서
20X0년 7월 1일부터 20X1년 6월 30일까지

(단위: 1천달러)

기부자제약 없는 순자산의 변동:

수익 및 이익:

기부금이익	8,640
수수료수익	5,200
투자수익(순)	6,650
유형자산처분이익	200
기타수익	150
기부자제약 없는 수익 및 이익 총계	20,840

제약이 해제된 순자산(Note D)

사업 제한 만족	8,990
유형자산 취득 제한 만족	1,500
기간 제한 만료	1,250

표10 의 계속

Endowment로부터 비용 승인 및 이후 관련된 기부자제약 만족	7,500
제약이 해제된 순자산 총계	19,240
기부자제약 없는 수익, 이익 및 기타 지원 총계	40,080
비용 및 손실:	
급여 및 복리후생비	15,115
타 기관으로의 보조금	4,750
업무추진비	3,155
서비스수수료	2,840
임차료	2,528
감가상각비	3,200
이자비용	382
비용 총계(Note F)	31,970
건물에 대한 화재손실	80
비용 및 손실 총계	32,050
기부자제약 없는 순자산의 증가	8,030
기부자제약 있는 순자산의 변동	
기부금	8,390
투자수익(순)	18,300
연금신탁부채에 대한 보험수리적 손실	(30)
제약이 해제된 순자산(Note D)	(19,240)
기부자제약 있는 순자산의 증가	7,420
총순자산의 증가	15,450
기초 순자산	270,640
기말 순자산	286,090

출처: ASC-958-205-55-13 예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번역

② 운영성과표(운영보고서) 성격

우리나라의 공익법인회계기준상 운영성과표는 일반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반면, 미국의 비영리법인회계기준상 운영보고서(Statements of Activities)의 경우 일반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가 융합된 보고서로 제약 있는 순자산과 제약 없는 순자산의 변동을 나타낸다.

순자산의 변동에 대해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주석에 표시하며, 미국의 비영리법인회계기준은 운영보고서에 직접 표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③ 운영성과표(운영보고서) 양식

우리나라의 공익법인회계기준상 운영성과표는 단일 유형의 양식이며 일반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 양식과 유사하다, 미국의 비영리법인회계기준상 운영보고서는 단일 열에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 기부자제약 있는 순자산의 변동과 기부자제약 없는 순자산의 변동을 각각의 열로 배치하는 유형, 기부자제약 없는 순자산의 수익, 비용 및 기타 변동에 대한 보고서와 순자산의 변동 보고서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유형 중 하나로 작성된다.

표11 운영성과표(운영보고서) 성격 및 양식 주요 차이점

우리나라	미국
· 일반기업회계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단일형식	· 일반기업회계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가 융합된 보고서로 제약 있는 순자산과 제약 없는 순자산의 변동을 나타내며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의 유형으로 작성

출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④ 영업활동 구분 표시

우리나라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한 사업이익(손실)을 표시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손익을 표시한다. 이는 운영성과표 양식이 기업회계의 양식과 유사하여 사업수익·비용과 사업외수익·비용을 구분하는 형태에 기인한다.

미국의 비영리법인회계기준은 전체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여 순자산의 변동을 나타내며,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표시할 수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니다.

표12 운영성과표(운영보고서) 영업활동 구분 주요 차이점

우리나라	미국
·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한 사업이익(손실) 표시	· 전체 수익·비용을 표시하여 순자산의 변동을 나타내며,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표시할 수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님

출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4) 요약 및 결론

- ▶ 미국 비영리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비교한 결과 재무제표 구성과 구분 회계에서 차이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를 융합한 형태의 운영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손익계산서 형태의 운영성과표를 작성하도록 함
 - 우리나라는 순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은 주식 기재사항으로 규정
 - 또한 미국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도록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금흐름표 작성을 요구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를 작성하도록 하지만, 미국의 경우 사업에 따라 구분회계를 요구하지 않음

- ▶ 미국 비영리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유사하지만, 미국 비영리회계기준에서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항목이 있음
 - (유동·비유동 구분) 우리나라는 자산·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도록 하지만, 미국의 경우 자산·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거나 구분 없이 유동성이 높은 항목 순으로 표시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 (운영성과표 양식) 우리나라는 단일 유형의 운영성과표 양식이 있지만, 미국의 경우 ① 단일 열에 작성 ② 기부자제약 유무에 따라 각각의 열에 작성 ③ 기부자제약 없는 순자산의 변동과 전체 순자산의 변동을 각각 작성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 (영업활동 구분) 우리나라는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이익(손실)을 구분표시하지만, 미국의 경우 전체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며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구분표시할 수도 있음

- ▶ 미국 비영리회계기준은 하나의 정형화된 재무제표 양식이 아닌 비영리단체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
 - 여러 가지 형태 중 비영리단체의 상황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으면 비영리단체를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비영리단체와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음
 -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법인 전체에 적용하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비교가능성 증대를 위해 하나의 정형화된 재무제표 양식을 선택함



센터 동향



- 국가회계 네트워크 사업 최종보고회
- 2021년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사업 사업실적 평가
- 202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 「공기업·준정부기관 교육사업 커리큘럼 개발」 위탁연구 최종보고



국가회계 네트워크 사업 최종보고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국가회계정보의 활용을 제고할 목적하에 한국정부회계학회와 공동으로 국가회계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물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2021년 11월 12일과 12월 1일, 2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구분	연구주제	연구자
대주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회계의 투명성 및 유용성 제고		
1	국가회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회계 오류의 분석과 개선방안	김봉환(서울대)
2	정부회계 유용성 제고를 위한 재무지표의 분석과 개선방안	조형태(홍익대)
3	성과정보와 회계정보의 활용에 관한 연구 -교육부 단위사업 성과평가 정보와 결산정보의 예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성시경(단국대)
4	국가 재무제표의 정보유용성 증대방안 -국토교통부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태(중앙대) 차상권(한양대)
5	코로나19에 따른 확대재정과 재정책임성 확보 방안	이정희(서울시립대)
6	민간투자사업의 공시개선방안 -도로를 중심으로-	남혜정(동국대)

[1차 최종보고회]

1차는 2021년 11월 12일(금) 오후 3시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김봉환 교수(서울대), 조형태 교수(홍익대), 김진태 교수(중앙대), 차상권 박사(한양대),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 남혜정 교수(동국대) 등 네트워크 연구진이 참석하여 각자의 연구주제에 대해 최종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지정토론자로는 이아영 교수(강원대)가 참석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

과제1 국가회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회계 오류의 분석과 개선방안 (김봉환, 서울대)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무제표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회계오류의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전체 회계오류 중 56.7%를 차지하는 자산 관련 회계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회계오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회계오류의 발생원인은 크게 법·규정·회계기준의 미비, 접근 가능한 정보의 부족, 결산업무담당자의 관련 업무 숙지 부족으로 파악되었으며, 각 원인별 정책 대안으로 법·규정·회계기준 보완, 디브레인(dBrain) 내 자산취득 확인체계 보완, 부처별 특화교육을 통한 국가회계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과제2 정부회계 유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표 분석과 개선방안 (조형태, 서울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부회계 재정지표 현황 및 전달방법 등을 해외 국가재무제표에서의 재정지표와 비교·검토하였다. 이어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현행 재정지표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결과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에 대한 재정지표 개발 필요, 기간 간 비교 및 국가 간 비교를 통한 이해도 제고, 외부재정지표 활용, 용어의 단순화 등을 재정지표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과제3 국가 재무제표의 정보유용성 증대 방안 -국토교통부 사례를 중심으로- (차상권, 한양대)

본 연구에서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토교통부 사례를 중심으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연계성의 핵심인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연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현금흐름표 작성,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한 용어 설명 보완, 통일성 있는 정보의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과제4 **코로나19에 따른 확대재정과 재정책임성 확보방안** (이정희, 서울시립대)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광범위한 확대재정정책에 대하여 검토하고 재정 책임성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향후 재정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재정책임성을 책무성, 지속가능성, 투명성으로 구체화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요소에 따른 재정책임성 강화방안으로 국회 및 독립재정기구에 의한 감독 강화, 재정준칙의 제도화, 열린재정 확대와 예산법률주의 도입 등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과제5 **민간투자사업의 공시개선방안 -도로를 중심으로-** (남혜정, 동국대)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공시현황을 분석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규정 및 공시 현황 등을 검토하고 해외 공시사례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국가재무제표에서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재무제표 주석정보 확대 및 세부정보 연계, 민간투자사업의 감독 기구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 토론 내용

지정토론

이아영 과제1에서 분석한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은 회계상에서 자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인다. 토지재평가 오류 개선과 더불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재평가 및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타 자산의 재평가를 통한 오류수정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제2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후속연구에서 정보수요자를 내부(정책결정자)와 외부(국회 및 일반국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다면 재정지표의 수요 및 활용가능성을 보

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4의 경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책임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한 문제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민 및 가계 재정책임성’과 같은 확대된 개념도 제시해 볼 수 있다.

종합토론

한소영 국가회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센터와 외부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궁극적 목표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판단된다. 과제1에서 분석한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유재산 자산인식시점에 대하여 감사원이 회계오류라고 인식하지 않고 ‘보고후사건’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과제2에서 제시한 재정지표의 시계열 및 국가 간 비교 등의 방안은 국가결산체계 개편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정 회계용어의 어려움, 화폐단위의 단순화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본 연구가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3에서 제시한 분류체계의 변경이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성 강화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보다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과제4는 국가회계에서 더 나아가 재정이라는 더 넓은 개념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과제5의 연구결과는 국가결산서의 주석 개편방안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세부공시 내용에 대한 기준 등은 향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윤영훈 과제1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매년 발생하는 회계오류 분석을 FGI 등을 통해 정형화하여 국가결산 교육 및 감사 등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과제2에서 주장한 GDP 대비 회계정보로 계산된 재정지표의 경우 국가 간 비교가능성 제고라는 장점과 동시에 정보왜곡의 우려가 있으므로 ‘GDP 대비’가 의미 있는 지표로 활용되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과제4는 현재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가부채를 재정 관리에 활용하여 미래 재정지출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양은주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회계의 투명성 및 유용성 제고」라는 네트워크의 대주제 안에서 다양한 정부회계연구를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과제1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하여 향후 담당주체(감사원, 센터 등)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면 실질적인 정책개선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

된다. 과제2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수요자 측면에서 재정지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과제3의 제목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국토교통부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는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과제4에서 제안한 재정책임성 강화방안에 대하여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대안의 현실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차 최종보고회]

2차는 2021년 12월 1일(수) 오전9시에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하였으며, 네트워크 연구진인 성시경 교수(단국대)의 최종발표와 외부토론자인 박성환 교수(한밭대)의 지정토론, 회의참석자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발표 내용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성과정보와 회계정보의 연계 및 활용 여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교육부 단위사업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점수와 단위사업별 결산정보(이용액 및 불용액)가 다음 연도 예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점수는 다음연도 예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이월액이 많을수록 다음연도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성과정보가 예산 결정과정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직전연도의 결산정보는 다음연도 예산 결정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주요 토론 내용

지정토론

박성환 성과정보가 예산 결정에 당위적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하지 않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과정보와 회계정보의 연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재정사업 분류체계의 문제점부터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는데, 교육부의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 존재 여부 및 이용가능 여

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점수 자체보다 직전연도 대비 증감 여부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심변수인 재정평가 점수를 변화율로 변경하여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종합토론

문창오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매년 자율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재정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형태로 이전 지출되는 비중이 크므로 이전지출에 대한 성과지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성과평가 및 예산편성에 대한 분류체계가 부처별로 차이가 있는지 또는 연도별로 변동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소영 현재 예산회계정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발생주의 회계정보와의 연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산의 증감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패널티 성격이 강한 예산감액 및 폐지에 중점을 맞추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예산회계정보와 성과정보의 연계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맞춘 연구이므로 연구내용에 맞게 연구제목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윤영훈 현재 패널분석을 위해 3년간(2017~2019년) 연속성을 가진 사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분석에 사용된 기간 동안 추가 또는 삭제된 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의 변동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으므로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추가분석할 필요가 있다.

양은주 현재 실증분석결과에 대하여 강건성 분석 및 세부분석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사업 자율평가지표에 실질행에 관한 평가요소가 포함되어 평가점수와 불용액 간의 상관관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각의 관심변수에 대하여 독립적인 분석결과도 제시되어야 하며, 재정사업 자율평가점수를 집행실적, 목표달성도, 사업성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평가점수를 평가등급으로 변경하여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위사업이 유지되더라도 단위사업 간 세부사업의 이동·통합·폐지 등이 분석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2021년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사업 사업실적 평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2월 22일 센터의 2021년도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환류하고자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자체평가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심재영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박세환 상임위원(한국회계기준원), 지현미 교수(계명대), 박성환 교수(한밭대)와 내부위원인 박노옥 선임연구위원(재정정책연구실)이 참석하였고,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전체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였다.

자체평가는 2021년 사업실적에 대해 '1 계획, 2 집행, 3 성과달성 및 환류'로 구분하여 이뤄졌다. 평가 결과, 94.5점으로 전년 대비 계획 및 집행관리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코로나 19 장기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교육 사업 개선, 기획재정부의 긴급수요과제 수행 및 제2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의 성과 등으로 전년 대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사업 환류 및 자체평가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첫째, 계획 및 집행지표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체평가를 위하여 향후 사업 계획 수립의 근거 및 집행 시 모니터링 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둘째, 집행지표와 관련해서는 2022년 회계기준 제·개정 사업으로 국가회계기준 개선 시 사후이행 검토와 『국가회계편람』 내 질의회신 내용 및 오류사례 등의 수록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달성 및 환류지표와 관련하여 감사원 지적 건수 등에 대해 단순 오류와 중대한 오류로 구분하고 심층적 분석을 통한 평가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더불어 정량적인 지표의 추가 개발 및 현행 정량지표에 대한 보조지표와 정성적 정보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2022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차년도 자체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센터 사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202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2월 13일(월) 사전 제작된 영상 강의로 회계 및 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인 ‘유튜브’를 활용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결산교육을 진행하였다.

2021년에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128개 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2개)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본 교육에서는 이기돈 회계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개요 및 절차, 2020회계연도 결산서 검토결과, 회계결산FAQ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최지영 회계사의 K-IFRS 제·개정사항, 주요 회계처리 및 주식 작성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강의가 이뤄졌으며, 12월 13일부터 5일간 ‘유튜브’에 강의영상을 게시함으로써 회계결산 담당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댓글 등을 활용한 질의·응답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1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교육 화면(12. 13.)





「공기업·준정부기관 교육사업 커리큘럼 개발」 위탁연구 최종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위탁과제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사업 커리큘럼 개발」 최종보고회가 2021년 12월 22일(수)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연구책임자인 전규안 교수(숭실대)가 커리큘럼 개발 연구 최종보고를 하였고, 정광화 교수(강원대)와 박지연 선임(한국생산성본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과제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센터는 이번 커리큘럼 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교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사업을 시범운영하게 된다. 센터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사업에 대한 연구진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위탁과제 최종보고 영상회의(12. 22.)



국가회계
재지통계



세미나



- 제2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결과보고
- '2021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결과보고
- '탄소인지예산제도의 추진방향과 과제' 웹세미나

제2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결과보고



가. 개요

- 주 제: 재정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역할:
재정위험과 자산·부채 관리를 중심으로
- 일 시: 2021. 11. 2.(화) 15:00~17:20, 2021. 11. 3.(수) 14:00~16:10
- 장 소: 전국은행연합회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 참가자 및 해외 발표자는 웹 심포지엄으로
실시간 동시 진행 <https://gafsc-seminar.kr>

〈주제발표 및 토론〉

1일차	<p>[기조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역할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p>[국가별 주제발표 -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재정위험 관리]</p> <p>[영국] 영국의 재정위험 보고(Manj Kalar, Kalar Consulting 대표) [호주] 발생주의 정보의 활용: 재정위험 식별 및 자산부채 관리를 중심으로 (Mike Blake, IPSASB(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오스트리아] 공공재정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정보의 활용에 관한 조사 (Bernhard Schatz, IPSASB 위원) [스위스] 스위스 재정위험 관리 및 식별을 위한 발생주의 회계의 역할 (Marc Wermuth, IPSASB 위원)</p> <p>[종합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용한 연금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패널: Ivor Beazley OECD 예산공공지출국 팀장, Thomas Berger IPSASB CAG 의장,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과장, 장윤정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한종석 아주대학교 교수 외 국가별 발표자 4명
------------	--

〈주제발표 및 토론〉

2일차	[주제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역할(한소영 국가회계팀장)
	[국가별 주제발표 - 발생주의 재무정보 기반 자산·부채 관리]
	<p>[영국] 영국의 국가 재정상태표 활용(Manj Kalar, Kalar Consulting 대표)</p> <p>[뉴질랜드] 재정위험 식별 및 자산부채 관리에서 발생주의 회계 정보의 역할 (ThuPhuong Truong,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교수)</p> <p>[캐나다]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캐나다의 재정위험 및 자산부채 관리(Brian Pagan, Capital Perspectives 대표)</p> <p>[프랑스] 재무제표가 프랑스의 자산부채 관리에 미치는 영향(Fabienne Colignon, CNoCP(프랑스 국가회계기준위원회)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p>
	[종합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용한 연금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논의 - 좌장: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 - 패널: Ivor Beazley OECD 예산공공지출국 팀장, Thomas Berger IPSASB CAG 의장,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재학 기획재정부 사무관, 최성훈 감사원 감사관 외 국가별 발표자 4명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제2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을 '재정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역할: 재정위험과 자산·부채 관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1월 2일과 11월 3일 이틀에 걸쳐 전국은행연합회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에는 관계부처, 국회, 학계, 회계전문가 등 국내 인사와 IPSASB, OECD 관계자, 필리핀 감사원 등 해외 인사를 포함하여 총 244명이 참여하였다.

국제심포지엄의 첫째 날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한경호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국장의 축사, 김완희 소장의 기조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어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재정위험 관리'를 주제로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국가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개회사 및 축사 화면

기조발표에서 김완희 소장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의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양일간 발표될 7개 국가와의 공동연구결과와 시사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며, 국가별 발표 세션에서는 영국 Kalar Consulting의 Manj Kalar 대표, 호주 Mike Blake IPSASB 위원, 오스트리아 Bernhard Schatz IPSASB 위원, 스위스 Marc Wermuth IPSASB 위원이 각국의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재정위험 관리 사례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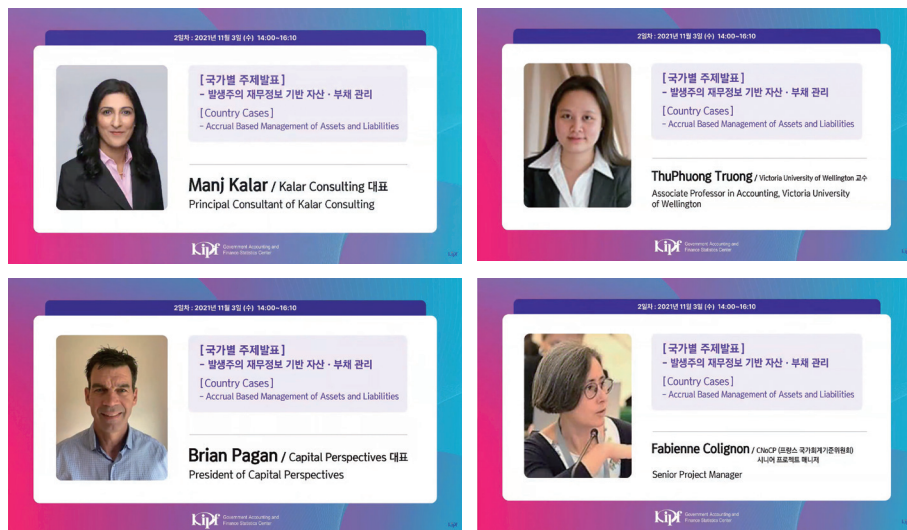


1일차 국가별 주제발표 화면 - 영국, 호주, 스위스, 오스트리아(시계방향 순서)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국가별 발표자와 함께 Ivor Beazley OECD 예산공공지출국 팀장과 Thomas Berger IPSASB CAG 의장,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과장, 장윤정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한중석 아주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패널들은 각국의 연구 결과가 발생주의 회계가 재정위험을

식별하고 수량화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자산손상과 관련된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재정상태표의 위험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발생주의 정보를 재정위험 관리에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국회 등 의사결정자와의 명확한 소통을 위해 재무제표의 메시지를 단순화하고 재무제표 활용이 재정 의사결정 과정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패널들은 재정준칙 법제화 등 최근의 재정개혁 모멘텀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제심포지엄의 둘째 날에는 ‘발생주의 재무정보 기반의 자산·부채 관리’라는 주제 아래 영국 Kalar Consulting의 Manj Kalar 대표,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의 ThuPhuong Truong 교수, 캐나다 Capital Perspectives의 Brian Pagan 대표, 프랑스 국가회계기준위원회의 Fabienne Colignon 시니어 매니저가 국가별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2일차 국가별 주제발표 화면 -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시계방향 순서)

국가별 주제발표에 이어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종합하였을 때 재정상태표 관리의 초점이 국가별·시대별로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상당히 광범위한 우발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일 뿐 아니라 분석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발행되기까지 다양한 정부기관의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통합결산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할 권한이 없을 경우 적절한 자산·부채 관리에 기

여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 많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수행하는 사업이 많아 통합결산서가 유의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센터는 해외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한 국제심포지엄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며, 2022년에는 올해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한 심층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웹 심포지엄 전체 영상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튜브(Youtube) 채널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일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Ple66Zmfppo>
- 2일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uULLE3TneTM>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1일차: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재정위험 관리

기조발표

재정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역할 The Role of Accrual Information in Fiscal Management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김완희 소장은 연구주제의 선정 배경을 설명하고 해외공동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개괄함

- 발생주의 활용사례에 관한 OECD와의 공동연구(2017) 결과, 재정위험 식별 및 자산·부채 관리에 관한 영국 등의 모범사례를 심층 분석할 필요성 대두
- 리먼브라더스 사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정위험의 식별·보고에 관해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스위스 사례 소개 예정
 - 최근 각국의 재정압박 상황 속에서 부각될 수 있는 주제인 자산·부채 관리와 관련하여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사례 발표 예정

- 각국 연구결과는 재정관리 과정에 대한 발생주의의 일관된 적용, 전담조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재정당국·국회·감사원의 주도적 역할 및 관심이 필수적임을 시사
- 한국의 경우 발생주의 정보를 2010년부터 산출해 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활용 노력 미진



기조발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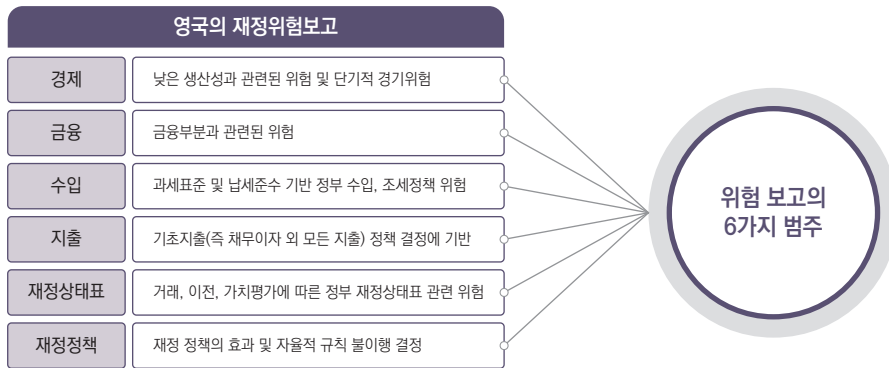
국가별 발표1 **영국의 재정위험 보고**
UK: Fiscal Risk Reporting

영국의 재정위험보고 발전 경과와 예산책임청의 역할, 재정위험보고의 현황과 재정위험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발표자: Manj Kalar)

- 재정위험보고의 발전 경과 및 예산책임청 소개
 - 재정위험보고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6년에 예산책임청 헌장을 공포하고 예산책임청을 설립하였으며, 예산책임청은 재정위험보고서를 현재까지 3차례(2017년, 2019년, 2021년) 발간함
 - 영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다르게 재정위험의 식별 책임과 관리·대응 책임을 분리하여 각각 예산책임청과 재무부가 담당함
 - 예산책임청은 실질적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회계사, 경제학자, 애널리스트 등 3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문조직이며, 경제·재정전망, 재정위험 및 재정성과 평가, 대차대조표 분석 등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보고 책임이 있음
- 재정위험보고 현황 및 재정위험보고서 주요 내용
 - 영국의 재정위험보고 체계는 위험의 범주를 경제, 금융, 수입, 지출, 재정상태표, 재정정책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함

- 재정위험보고는 우발부채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환기,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논의 촉발, 정부정책 개선 지원과 같은 효과를 가진
- 재정위험보고서는 중기(5년) 및 장기(50년) 재정위험에 관한 정보를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분류·정리하여 보고함
- 재정위험보고서의 구성 내용은 계속 변화 중이며, 특히 2021년 재정위험보고서는 치명적 위험 주제, 즉 팬데믹 위험, 기후 위험, 공공채무 비용 중심으로 위험을 식별·평가하도록 재편됨

그림1 영국 재정위험보고의 6가지 범주



국가별 발표2

호주 발생주의 정보의 활용: 재정위험 식별 및 자산부채 관리를 중심으로
 Use of Accrual Accounting Information focusing on Fiscal Risk Identification and Assets and Liabilities Management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는 호주 정부의 주요 보고서를 소개하고, 발생주의 정보가 의 사결정 및 공공재정관리에 미친 영향과 성공 요인을 설명함(발표자: Mike Blake)

- 발생주의 정보 활용 주요 보고서
 - 발생주의 정보가 활용되는 정부 공식보고서는 총 6개이며, 그중 통합표시체계는 호주만의 독특한 것으로 정부 보고서 간 비교가능성을 더해 줌
 - 위험보고서 등 다수 보고서로 구성된 연방정부 예산서는 재정위험 식별 및 자산·부채 관리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재정위험의 식별 및 관리에 유용한 수치로는 기초현금수지, 순운영수지, 총부채 및 총자산, 재정수지 등이 있음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원가 및 인력 소요
 - 식별된 정부 공식 보고서들의 작성에 소요된 원가 및 전문인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뿐더러 유용하지 않으므로, KIPF에서 호주 재무부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의사결정 및 공공재정관리에 미친 영향
 - 예산추정 과정이나 위원회 활동 등 국회 측의 발생주의 예산정보 활용도가 매우 높았으나, 재무제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음
 - 발생주의 정보는 독립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재정위험의 식별 및 관리에 유용한 수치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공공재정관리 의사결정 개선에 필수적임

- 발생주의 정보 활용의 성공 요인
 - 독립적인 회계기준과 외부 감사기능 및 예산처 설치, 최고위층의 관심과 지원, 빅뱅식 개혁 지양 등을 발생주의 정보 활용의 성공 요인으로 언급

그림2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호주 정부의 공식 보고서 종류

- ✓ 법적 요건은 호주 정부가 재정위험 및 자산부채를 식별·보고·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견전하고 일관적인 기반을 제공함
- ✓ 식별된 정부의 공식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별도로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발생주의 기반임)



출처: Mike Blake, *Use of Accrual Accounting Information focusing on Fiscal Risk Identification and Assets and Liabilities Management*, 2021.

국가별 발표3 오스트리아 공공재정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정보의 활용에 관한 조사
Survey on the use of accrual information for PFM - Aust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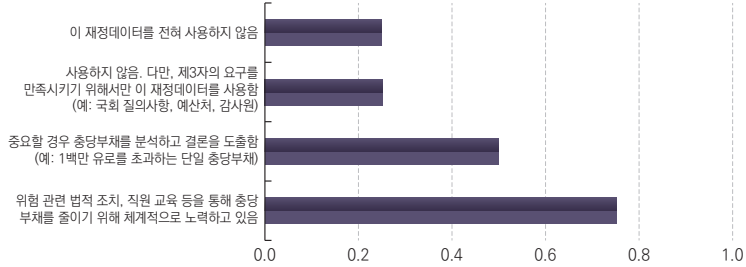
오스트리아 공공재정관리 제도를 개괄하고,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재정위험의 관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함(발표자: Bernhard Schatz)

- 오스트리아 공공재정관리제도의 구성
 - 재무부와 감사원이 예산·회계 규정을 제정하고, 감사원과 의회는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중앙화된 IT 시스템 및 기장기관이 있으나 재정관리의 실질적 수행은 보고실체가 담당함
- 재정위험 관리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재정위험은 공공재정관리의 핵심 영역이며,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장·단기 부채, 손상 이상 3개 범주의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재정위험 관리에 공헌할 수 있음
 -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상기 정보의 체계적 활용 정도는 충당부채, 장·단기부채, 손상차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절반이 부채 정보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차입 기능이 중앙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요약 및 결론
 - 현재 발생주의 정보가 활용되고 있으나 재정관리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은 아님
 - 주로 외부보고 등 법적 요구를 준수하기 위한 활용이 많으나, 충당부채·우발부채 정보의 활용 사례는 더 광범위하게 나타남
 - 회계지식의 부족, 고위 의사결정자의 낮은 정보 수요, IT 시스템의 유연성 문제 등이 대표적인 장애요인으로 조사됨
 - 재정위험 관리에 발생주의 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일반 및 전문 교육훈련 강화, 발생주의 정보가 통합된 재정준칙 사용에 대한 지지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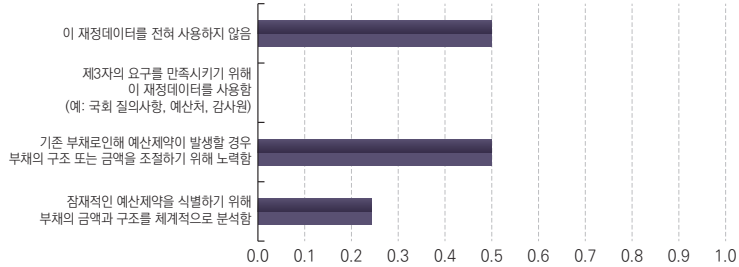
그림3 오스트리아의 발생주의 정보 활용 재정위험 관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재정위험관리-정보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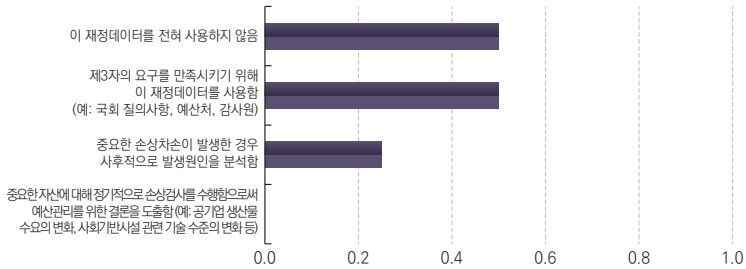
재정위험관리를 위한 총당부채 정보의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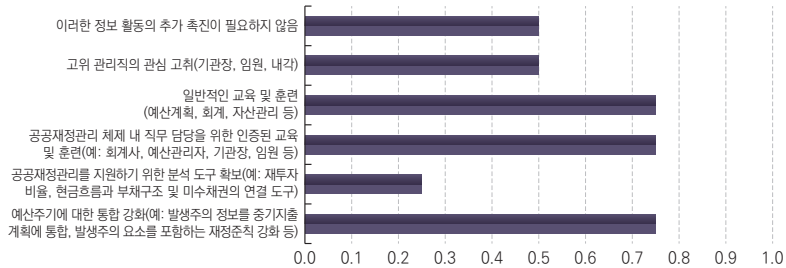
재정위험관리를 위한 부채 정보의 활용도



재정위험관리를 위한 손상차손 정보의 활용도



재정위험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정보 활용 촉진 아이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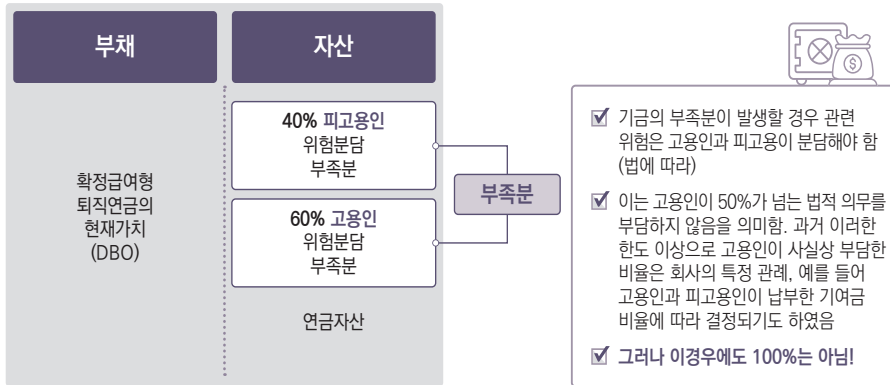
출처: Bernhard Schatz, Survey on the use of accrual information for PFM - Austria, 2021.

국가별
발표4스위스 재정위험 관리 및 식별을 위한 발생주의 회계의 역할
The Role of Accrual Accounting in the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Fiscal Risks in Switzerland

스위스 연방정부의 발생주의 개혁 과정과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재정위험 관리 사례를 소개함(발표자: Marc Wermuth)

- 스위스 연방정부의 발생주의 개혁 과정
 - 지방정부(칸톤)의 회계 및 예산제도는 1980년대부터 2단계(수정발생주의)를 적용 중이었으며, 지난해 3단계(일부 완전발생주의)로의 전환을 개시하였고, 최종 목표는 4단계(IPSAS 완전발생주의)임
 - 연방정부의 경우 2007년부터 IPSAS 기반의 발생주의로 대부분 전환되었으며, 2017년에 IPSAS와의 차이를 축소하였고, 2022년에는 주요 재정정책 수단인 Debt Brake를 발생주의 기반으로 운영할 예정임
- 재정위험 관리에 대한 발생주의의 적합성
 - 현금주의 예산제도는 기간 경과 후 파악되는 위험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나, 발생주의 회계는 이를 부채 인식 시점에 고려함
 - 비용은 지급 시점이 아닌 총당부채 인식 시점의 재정준칙에 반영됨
-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재정위험 관리 사례
 - 코로나 관련 예상보증손실은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23억스위스프랑의 총당부채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차년도 재정준칙 관련 재정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우발부채였던 110억스위스프랑의 확정급여채무를 재정상태표에 인식하도록 재무제표를 재작성함에 따라 경제적 실질과 연방정부의 노출위험을 충실히 표현하게 되었으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킴
- 발생주의 정보 활용의 효과
 - 발생주의 정보 활용 시 재정정책 수단(Debt Brake)의 개선, 재정위험의 예산 반영 시기 단축, 우발부채 관련 재정위험의 식별·측정 지원, 재무보고 및 재정준칙 측면에서 유용함

그림4 스위스의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재정위험 관리 사례-퇴직연금채무의 재정위험 공유



출처: Marc Wermuth, *The Role of Accrual Accounting in the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Fiscal Risks in Switzerland*, 2021.

종합토론 발생주의 기반의 효과적인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경험 및 대책 논의

Ivor Beazley OECD 예산공공지출국 팀장

- 각국 사례는 재정위험의 관리에 관한 다양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발생주의 회계가 재정위험을 식별하고 수량화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생각함
- 스위스 사례는 발생주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재정위험 이슈를 노출시킴으로써 정부정책의 변화와 실제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영국 사례는 정부가 선택한 재정위험이 상황 및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며, 예산책임청과 재무부의 보고 분리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도 제공함

(좌장) 재정위험이 예산 추정에 포함되거나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omas Müller-Marquès Berger IPSASB CAG 의장

- 발생주의 회계정보 중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명시적 부채인 금융부채를 넘어 부담하는 의무와 관련되므로, 예산 또는 추정치 대비 미래의 가장 큰 지출을 식별하는 데 적합함에 따라 특히 지출위험과 관련된 기여가 클 것으로 생각함
- 재무제표에는 자산 손상, 충당부채, 우발부채와 관련된 정기적인 평가가 반영되므로 발생주의 회계정보는 재정상태표 위험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주석에 공시됨에도 지출 위험이나 재정상태표 위험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음. 우발부채의 경우 표시 목적으로는 이를 묶거나 분류하되, 신규 유형의 우발부채의 식별·공시를 저해하지 않도록 기타 항목 없이 완전한 목록을 나열하여 관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또한 재정위험 관리와 자산부채 관리 역시 분리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산부채 관리가 재정위험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하나의 재무제표가 두 가지 관리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이 둘은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재정위험 관리와 관련된 발생주의 회계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조언하고자 함
 - 첫째, 발생주의 정보가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재무제표가 복잡한 반면 의사결정자의 회계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국회 또는 정책입안자와의 명확한 소통과 그들에 대한 교육에 투자하고 재무제표가 주는 메시지를 단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둘째, 영국,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재무제표의 활용은 법과 제도에 따라 제도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로 공공결산서 기반의 재정위험에 대한 검토 및 보고 의무를 갖는 공공결산위원회 등을 설립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셋째, 노출된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하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위험에 대한 탁월한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발생주의 회계정보 활용을 내재시킬 필요가 있음

(좌장) 우리 발생주의 정보 활용이 재무제표의 복잡성과 교육 부족에 의한 것이므로 관련 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영국과 같이 발생주의 정보 활용이 제도화되어야 하고, 또 사전적인 관점의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세 가지 제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과장

- 오스트리아가 다수의 보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주요 재정위험 중 보증 관리를 위해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배경 혹은 사유가 궁금함
- 영국의 우발부채 승인체계의 적용범위가 전체 공공부문인지 혹은 중앙정부에 국한된 것인지, 그리고 2019년 「재정위험보고서」상 정책위험과 기후변화 위험의 정의 및 측정 방법에 대해 문의함

(좌장) 한국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보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보증을 적극적으로 관리 중인 오스트리아 사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말씀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 Bernhard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함. 재정위험 관리에 발생주의 정보를 활발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도 공감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장윤정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 최근 한국은 재정준칙 법제화 등 다방면에서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활용한 재정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멘텀을 활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스위스 사례와 같이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투명성과 일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회계기준을 개정해야 함. 이를 통해 재무보고서의 수치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이해가능성 문제로 인한 활용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며, 여러 국가의 재정위험 관리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 둘째, 우발부채의 공시 범위를 위기관리 차원에서 다변화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는 정부의 국민연금 관련 지급의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셋째, 장기재정전망보고서에 순자산, 원가 등 다년간 축적된 정보를 사용하는 발생주의 핵심지표에 대한 전망을 포함시켜야 함
 - 마지막으로, 위험 또는 환경 변화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변경 내역을 「장기재정전망보고서」에서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으며, 향후 영국과 같이 사후 오차분

석을 수행할 수준이 된다면 장기재정전망의 한 챕터는 공기업 채무, 건강재정 등 관련 위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필요함

(좌장) 재정규칙, 회계기준 개선 등 내년에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해주셨음. 장기적인 예측의 정확도와 관련하여 언급해주셨는데, 영국이 이러한 측면에서 모범이 되는 국가이므로 관련된 답변을 요구드림

한종석 아주대학교 교수

- 한국 재정당국은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완전히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오늘의 논의가 재정당국으로 하여금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통해서 재정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데 사용한다면 바람직할 것임

(좌장) 귀중한 토론 감사 드림

Manj Kalar Kalar Consulting 대표

- 발생주의 도입 이후에도 발생주의 정보의 실질적 활용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 영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발생주의를 보완적 제도로 사용한 바 있음
- 영국 정부가 코로나 추적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3,700억파운드에 이른다는 사실과 같이 재정위험과 관련하여 정부가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재정위험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함

(좌장) 영국의 경우 가장 앞선 부채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함

Mike Blake IPSASB 위원

- 「세대 간 보고서」는 향후 40년, 즉 1~2세대에 걸쳐 정부의 현재 정책 설정이 지속될 경우 마주할 수 있는 미래의 위험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장기 미래와 관련된 보고서이므로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가정 혹은 판단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호주의 경우 그 주기가 5년임
- 미래 예측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예측에 오차가 있더라도 「세대 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 수립에 훨씬 유익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세대 간 보고서」의 작성을 적극 권고한 바 있음

(좌장) 「세대 간 보고서」에 관한 제안과 권고에 감사드립니다

Bernhard Schatz IPSASB 위원

- 오스트리아의 보증 관리의 시사점은 매우 명확한 법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보증 한도가 명시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오스트리아는 전기 수익의 175%를 보증의 한도로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보증 발행을 승인하는 주체와 위험을 감수하는 주체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이로 인해 보증 발행 등 보증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다 신중한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임
- 상당수의 실체 또는 개인과의 거래를 추적하고 보고체계에 통합해야 하므로 정보 관리 역시 중요하며, 보증충당부채에 대한 발생주의 예산을 실제 산정하여 편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보증관리 제도가 될 수 있음

(좌장)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는 답변이었음. 한국의 경우 아직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발생주의 예산제도 없이는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완전히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함

Marc Wermuth IPSASB 위원

- Debt Brake는 스위스의 매우 중요한 재정정책 수단으로 1990년대 정부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투표로 도입이 결정된 제도임
- 발생주의 회계 및 예산제도 시행이 추진된 이후에도 Debt Brake는 여전히 현금주의 기반이었으나, IPSAS가 도입된 후 이를 발생주의 기반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투표가 다시 진행되었음
- Debt Brake가 발생주의 기반으로 개선된다면 정부재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비약적인 개선은 재무부 장관 및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함

(좌장) 귀중한 답변 감사 드림



1일자 종합토론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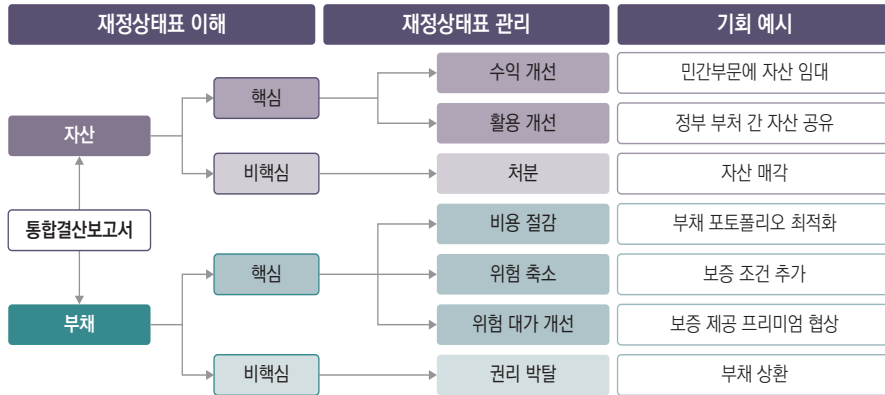
2일차: 발생주의 재무정보 기반의 자산·부채 관리

국가별 발표1 **영국의 국가 재정상태표 관리**
UK: Use of Government Balance Sheet

영국의 통합결산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유관기관 소개, 재정상태표 관리를 통한 발생주의 회계의 효익을 설명함(발표자: Manj Kalar)

- 영국 공공재정관리의 개요
 - 1996년부터 중앙정부의 발생주의 도입을 시작했으며 2001~4년과 2004~7년에 걸쳐 중앙정부 실체에서 공공부문으로 범위를 점차 넓혀 갔으며, IFRS를 도입함
 - 2007~9년 이후 2009~10년에 통합결산서를 최초 발간함
- 발생주의 정보에 기반한 자산·부채 관리
 - 더 나은 자산관리를 통해 연간 GDP의 3%까지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순금융가치가 높은 국가일수록 낮은 이자율을 지불하며 건전한 재정상태표를 보유한 국가일수록 더 짧고 약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경험함
 - 결산 담당자와 국민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의 참여와 데이터의 통찰력 있는 활용, 발생주의 재정정보의 추이의 파악이 중요
- 정부 재정상태표 평가 보고서 시리즈
 - 감사원에 의해 2016~17 공공부문통합결산서에 대한 감사원장 보고서 제안사항에서 시작되었으며, 금융자산·투자자산, 정부차입, 연금,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을 주제로 함
- 재정상태표 분석 보고서
 - 영국 재무부 내 재정상태표 관리단에 의해 2017년에 최초 발간되어 자산과 부채를 핵심과 비핵심으로 구분해 관리 목표를 설정한 후 구체적인 수행전략을 세우는 재정상태표 분석 접근법과 3가지 포트폴리오로 나누어 재정상태표를 분석하는 재정상태표 프레임워크를 개발함

그림5 영국의 재정상태표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출처: Manj Kalar, UK: Use of Government Balance Sheet, 2021.

국가별 발표2

뉴질랜드: 재정위험 식별 및 자산·부채 관리에서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역할
 The Role of Accrual Accounting Information in Fiscal Risk Identification and Assets and Liabilities Management(A New Zealand Perspective)

뉴질랜드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개요, 발생주의를 활용한 재정위험의 식별 및 발생주의 정보 활용 보고서를 소개함(발표자: ThuPhuong Truong)

- 뉴질랜드 공공재정관리의 개요
 - 1989년 「공공재정법」에 포함된 책임 있는 재정관리 원칙부터 예산 전략 및 정책 개발, 예산 집행 및 모니터링, 월간 및 연간 재무보고, 감사 및 검토, 피드백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전체 시스템에 발생주의 회계를 활용함
 - IPSAS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수립된 재무보고 기준 사용
 - 재정 정책 및 예산 책정 단계에는 복지 예산, 경제 및 재정업데이트 보고서가 활용되고, 재무보고 단계에서는 월별 및 연차 재무제표가 활용되며, 전략 및 계획 단계에서는 투자보고서와 장기재정상태표 보고서가 활용됨
- 발생주의 활용 재정위험의 식별
 - 재정상태표 위험을 사회활동, 재무활동, 이윤추구활동으로 나누어 분석(2018 투자보고서)

- 발생주의 정보에 기반한 자산·부채 관리
 - 발생주의 재무정보 기반 자산관리를 위해 정부기관의 투자실적을 평가하는 투자자 신용 등급(ICR) 제도와 자본 비용이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도록 고안되어 자산 간의 적절한 혼합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본차입비용 제도를 도입함
 - 국가 재정상태표 관리의 중요성과 관리 개선을 보여주기 위해 4년 주기로 발간되는 투자보고서는 자산 및 부채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봄

**국가별
발표3**

캐나다의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캐나다의 재정위험 및 자산·부채 관리
Using Accrual Information to Manage Fiscal Risk, Assets and Liabilities
in the Government of Canada

캐나다의 공공재정관리 발전의 정치·문화적 배경,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소개함(발표자: Brian Pagan)

- 캐나다 공공재정관리의 개요
 - 1995년 캐나다 공공부문 재정관리 위기 이후 2003년이 전환점이 되어 발생주의 기반 예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장기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킴
 - 현재 캐나다는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 방식을 모두 활용하며, 예산서와 결산서에서는 재정위험 식별 및 관리, 자산·부채 관리, 재정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정보 및 분석에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함
- 발생주의 정보에 기반한 자산·부채 관리
 - 「재정관리법」에 의해 작성되는 캐나다 공공부문 결산서는 감사받은 후 연결재무제표, 부속 재무정보 및 분석결과를 수록하며 예산서에 대응되도록 발생주의에 기반하여 작성됨
 - 발생주의 재무정보는 행정부가 예산 결정과정에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자산 및 부채를 분류별로 관리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함

- 주요 성공요인
 - 명확한 정책 방향성 및 리더십, 조직 역량, 커뮤니케이션 및 지속적인 지원

국가별 발표4 프랑스, 재무제표가 자산부채 관리에 미치는 영향
How Financial Statements help Managing Assets and Liabilities in France

프랑스 중앙정부의 조직과 재무보고 개요, 사회보장 부문의 재무보고와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이용정도를 소개함 (발표자: Fabienne Colignon)

- 프랑스 공공재정관리의 개요
 - 2001년 8월에 공포된 법률에 따라 2006년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최초로 발간
 - 현재 프랑스 공공재정관리의 중심은 예산으로, 현금주의 원칙을 사용하는 예산 이 지출관리를 위해 설정됨
 - 중앙정부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 기반 재무보고는 여전히 폭넓은 지원이 부족함
- 발생주의 정보에 기반한 자산·부채 관리
 - 발생주의 재무제표 발간으로 인해 철저한 추적 및 더 나은 품질을 위한 후속 조치 등 자산 관리가 개선되었으며, 비금융 부채의 기록 등으로 부채 관리가 개선되고 약정과 관련된 부외금액의 관리도 개선됨
- 사회보장 부문 재무보고
 - 복잡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특정 재정법」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보장 부문의 경우 예측 및 목표에 따른 예산을 발생주의 기준으로 제시함

종합토론 발생주의 재무정보 기반의 효과적인 자산·부채 관리를 위한 경험 및 대책 논의

Ivor Beazley OECD 예산공공지출국 팀장

- 발생주의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장기적 재정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며, 재정상태표가 잘 발달되어 있고 이런 도구를 잘 사용할수록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도 회복 가능함

- 국가별로 인상 깊었던 점은 뉴질랜드의 경우는 복지 서비스에 집중하며, 캐나다의 경우 개혁이 되기 위해 훈련, 인력,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 강조

Thomas Müller-Marquès Berger, IPSASB CAG 의장

- 공적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재정상태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함. 발생주의를 실행할 때 유용한 자산 관리에 대한 첫 번째 도전과제는 자산의 최초 인식임
- 뉴질랜드의 경우 정부의 주요과제가 올바른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사용한 것이 자산·부채 관리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임. 또한 자산의 성과를 측정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연결해야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 강조
- 회계책임성은 투자 및 재정조달 결정을 내리는 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 결산으로 인해 공공 자산부채관리가 적절히 된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상위정부와 하위정부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짐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영국의 다양한 정부기관(NAO, OBR, HMT)의 노력과 분석 보고서 발행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 우발부채의 관리 범위와 종합 관리가 인상적임
- 한국은 충당부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함으로써 부채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발전을 보였으나, 자산관리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임

이재학 기획재정부 사무관

- 영국에서 자산과 부채를 포트폴리오별 분류, 핵심·비핵심별 분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과, 뉴질랜드에서 투자보고서, 복지예산, 장기재정상태표 등 재정운영·관리에 대한 다양한 수준과 관점의 분석을 통해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인상 깊음

- 한국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출이 많고, 중앙-지방 정부 간에 함께 수행하는 사업이 많아 통합결산서가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 다만 통합결산서 작성을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결산서의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지방재정 분권에 대한 이슈 등이 있음

최성훈 감사원 감사관

- 자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영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큼. 자산을 핵심·비핵심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함. 국가 부채총량에 대한 우려 등 부채 관리 측면에도 관리가 필요한데 뉴질랜드의 자본차입비용이 고려해 볼 만한 시스템인 것 같음
- 통합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채가 과소 계상되어 관리되는 문제도 있으며 통상적으로 국채이자율이 공공기관의 조달이자율보다 낮은 점을 감안할 때 기회손실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통합결산서가 필요함

(좌장)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자산부채를 관리하는 것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며 위기상황에서 회복력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으며, 통합결산의 경우 긍정적이나 다만 법과 제도적인 제약이 있으며 통합 자산·부채에 대해 통제하기 어렵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음

국가별 발표자의 답변 및 추가 의견

- (영국) Manj Kalar, Kalar Consulting 대표
 - 질문 ①: 적시성 문제를 포함하여 통합 결산의 어려움
 - 답변: 개별 계정을 감사받은 후에 통합해야 하며, 정보 선별 프로세스를 통해야 하므로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림. 영국의 경우 회계기간이 끝난 후 통합하는데 9개월이 소요되며, 적시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임

- 질문 ②: 비핵심 자산의 분류 기준, 효과, 구체적 사례
- 답변: 지역에 따라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며, 예를 들어 국가의 병원이나 국가 건물 등의 비용을 민간과 비교하여 얼마나 드는지를 고려해서 핵심인지 비핵심인지 결정을 함

(좌장) 핵심과 비핵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은 국가별, 제도별, 목적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우선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해 보임

• (뉴질랜드) ThuPhuong Truong, 웰링턴빅토리아 대학교 교수

- 질문 ①: 복지예산이라는 보고서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지 여부
- 답변: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투입 자산과 부채를 비용-효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뉴질랜드의 경우 효용성을 더 넓게 보려는 노력에서 나온 보고서임. 어떤 자산과 부채를 이용하면 복지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기준임. 예를 들어서 경제가 회복력을 갖기 위해, 인력의 개선을 위해 또는 어린이 복지 증진을 위해 어떤 자산이 필요인지 고민함. 예산의 경우 예산 편성에 반영되기보다 예산이 어떻게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볼 수 있게 해줌

• (캐나다) Brian Pagan, Capital Perspectives 대표

- 질문 ①: 발생주의 도입 당시의 정치적 상황
- 답변: 1990년대에 공공재정 관리와 관련된 위기가 있어 여러 정부기관들이 재조직되었으며,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논의하였음. 이때 중요한 점이 시스템 적용 능력, 기술 역량, 의사결정이었음.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후 중요성을 알게 되며 점차 발전하게 됨. 특히 IT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시작하면서 소통도 잘할 수 있게 되며 추가적 정보가 만들어짐
- 질문 ②: 발생주의가 강력한 도구임에도 현금주의로 채무관리를 수행하는 이유
- 답변: 발생주의 회계는 정보 분석과 계획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현금주의 회계의 경우 통제가 더욱 잘 되고, 즉각적인 수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는 두 가지 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방향을 취함

• (프랑스) Fabienne Colignon, CNoCP 시니어 매니저

- 질문 ①: 프랑스의 발생주의 정보 활용을 더 높이기 위한 다음 단계와 그 과정에서 CNoCP 역할은 무엇인지
- 답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실체들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는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음. 또한 채무와 관련해서 기후변화와 같은 재정위험을 고려할 노력을 할 것임. 또한 CNoCP는 재정 및 비재정 재무정보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임

(좌장) 캐나다의 경우 경제적 위기가 결국 발생주의 회계의 정착에 도움이 되었듯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도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함



2일차 종합토론 화면

‘2021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결과보고

1. 개요

- 대주제: 위기상황에서의 정부회계의 역할
- 일 시: 2021년 12월 3일(금) 13:00~18:30
- 장 소: 차바이옴플렉스 B-204호
- 주 최: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관: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속가능 회계·재정 연구센터

〈주제발표 및 토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좌장] 박성환(한밭대)

[주제1] IMF 기후지표 도입방안

발표자: 박윤진(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토론자: 박찬영(목포대), 차상권(한양대)

[주제2] 민간투자사업의 공시개선방안-도로를 중심으로-

발표자: 남혜정(동국대)
토론자: 김범준(카톨릭대), 최정우(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제3] 정부회계 유용성 제고를 위한 재무지표의 분석과 개선방안

발표자: 조형태(홍익대)
토론자: 이계형(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안중기(서울대)

2. 발표 및 토론결과 요약

가. (주제1) IMF 기후지표 도입방안 연구(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주요 발표내용

- IMF의 기후변화 지표 도입
 - 국제사회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 및 목표에 관한 기후변화협약 체계 등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IMF에서는 「기후 변화 지표 현황표」를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성 및 기후문제 해결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함
 - IMF에서는 정부정책지표와 관련하여 국가별로 환경세, 기후 관련 보조금, 환경 관련 정부지출 자료 작성을 권고함
- 환경세, 보조금 현황분석 및 시범 작성
 - 우리나라 환경 관련 조세 현황 분석을 통해 IMF 서식에 따른 에너지세, 운송세, 오염세, 자원세 구분 집계 및 세부화
 - 에너지세는 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운송세는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소유분, 자원세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대부분을 차지함
 - 정부지원 보조금 중 온실가스배출 증가 및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녹색보조금과 갈색보조금을 기후 관련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여 구분 집계
 - 녹색 보조금이 갈색보조금을 상회하여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기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장려하는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선을 위해 기후 변화 관련 다양한 통계 수집 등이 선행되어야 함
 - 기후 변화 관련 다양한 재정지표의 산출 및 관리는 이러한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 토론내용

- 환경세 시범작성 시 환경 관련 부담금도 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지표의 포괄범위를 지방부문까지 확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이전, 민간 이전 등 보조금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
-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경우와 같이 형태적으로는 환경세이나 갈색 보조금으로도 볼 수 있는 사항 등 분류의 명확성을 높일 필요
- 기후 관련 지표 산출을 통해 환경개선실적 등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나. (주제2) 민간투자사업의 공시개선방안-도로를 중심으로-(남혜정, 동국대)

주요 발표내용

- 민간투자사업(PPP)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공시현황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
 - 도로를 중심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규정 및 공시 현황 등을 검토하고 해외 공시 사례와 비교분석
- 현재 국가재무제표에서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재무제표 주석정보 확대 및 세부정보 연계, 민간투자사업의 감독기구 설립 등의 개선방안 제시



주요 토론내용

- 최근 언론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시사적인 주제로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은 장기간에 걸쳐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 최근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수익에 대한 낮은 기대와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기초가 변화하기 위해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시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의 주장에 공감함

다. (주제3) 정부회계 유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표 분석과 개선방안(조형태, 홍익대)

주요 발표내용

- 다양한 정부회계 재정지표 및 전달방법 등을 해외 국가재무제표에서의 재정지표와 비교·검토함으로써 재정지표의 유용성 제고 및 개선방안 제시
- 설문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재정지표의 유용성 분석
- 설문결과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에 대한 재정지표 개발 필요, 기간별 및 국가 간 비교를 통한 이해도 제고, 외부재정지표(GDP 등) 활용 고려, 용어의 단순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주요 토론내용

- 정보산출자 중심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재정지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설문대상이 학계 및 공공기관 근무자 위주였으나, 후속연구에서 설문대상을 의회, 일반국민, 예산담당자 등 정보이용자를 세분화하여 비교분석한다면 보다 다양한 시사점 제공이 가능할 것임

- 기존 재정지표에 대한 시계열 분석 등 국내 재정지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포함하여 재정지표의 유용성에 대한 설득력 제고
- 해외 재정지표에 대한 현황분석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사례 및 시사점을 내용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2021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현장 사진(12. 3.)



‘탄소인지예산제도의 추진방향과 과제’ 웹세미나



가. 개요

- 제 목: 탄소인지예산제도의 추진방향과 과제
- 일 시: 2021년 11월 22일(월) 14:00~16:00
- 장 소: 웹세미나(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중회의실)

주제: 탄소인지예산제도의 추진방향과 과제

[발표자]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 회] 이정미(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선임연구위원)
 [토 론] 허경선(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 센터장)
 조영탁(지방행정발전연구원 지속가능도시환경연구팀장)
 김완희(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문창오(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부소장)

나. 주제발표 내용 요약

배경 및 정책동향

- 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고조 및 탄소중립 노력 가속화
- 기후목표를 희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재정지출뿐 아니라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탄소세 부과 등 목표 지향적 공공지출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장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요구 확산

: 에너지 투자의 70% 이상이 정부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에너지전환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경제회복과 탈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

-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녹색예산제 시행, 아시아 개도국에서 시작되어 10년이 넘었으며 최근 들어 새로운 관심 증가

: 특히 EU는 코로나19 경제회복정책과 연계하여 환경지출이 37% 이상인 계획(평가 의무화)에 대해서만 지원, 다른 EU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6개국이 기후예산태깅 인력 훈련 중(I4CE, 2021)

• 국내정책 및 입법동향

-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년 12월)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 강조

: 수입 · 지출 전반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친화적 재정 프로그램 구축 · 운영, 탄소의 환경적 ·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 도입

표1 국내 정책 및 입법 동향

구분	관련 제도	주요 내용
국가재정 및 국가회계법 개정 ('21. 6. 15)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 시범적용 후 2023년부터 적용 -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및 평가 등 포함 - 온실가스 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기금결산서 작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변화 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과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7. 27.)	기후변화인지 예산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표1 의 계속

구분	관련 제도	주요 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탄소인지 예산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인지예산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탄소인지예산서, 탄소인지결산서, 탄소감축 영향평가,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 설치운영, 탄소감축 인식 제고 교육과정 운영,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방안 마련 및 지원

• 탄소인지예산의 개념

- 탄소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과 같이 특정 목표에 맞춰 자원과 인센티브를 집중, 조정하고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우선순위 예산 편성(priority budgeting)의 한 형태(OECD, 2019), 성과예산 책정의 매우 구체적인 형태
- 탄소인지예산에 대한 국내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다가,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용어가 통일될 전망
- 예산 편성 및 지출이 탄소(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예산과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구조와 규칙을 바꾸는 정책수단
 - : 예산이 탄소배출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예산집행 결과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예산기법 내지 방법론
 - : 객관적인 증거와 방법론을 기반으로 정량화된 수치로 표현하고 측정·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와 차별화

• 탄소인지예산의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유해가 되는 지출과 수입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쉽게 판별 → 유해 보조금과 세금을 줄이는 대신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예산 비중을 높이도록 예산을 변경하고, 인센티브를 재설계하여 시장 주체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유도
 - : 정책과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화하여 프로그램의 비용 효과성, 예산 할당의 목표 달성 기여도, 자원 부족 상태, 정책 우선순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 목표 이행 모니터링 촉진 및 보고체계 개선

: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촉진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담당자,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 부서·부문 간 조정과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정책목표의 통합 촉진

국내외 사례

• 해외사례

① Rio Marker

- 기후변화 완화 활동의 유효성 기준

: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온실가스 저장소 보호 및 증대에 기여

: 역량개발, 정책개발, 연구강화로 기후변화의 수혜국 발전 목표와 통합에 기여

: 리우 협약의 의무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개도국의 노력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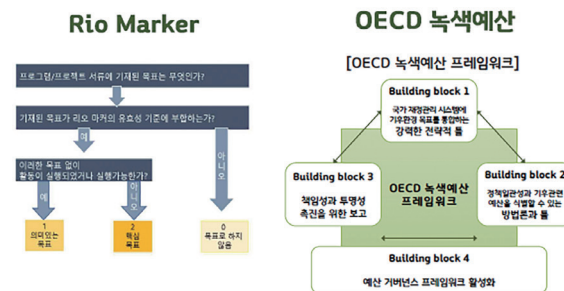
② OECD 녹색예산

- OECD 녹색예산의 파리 협력

(Paris Collaborative On Green Budgeting)_2017

: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 등 환경목표와 국가의 예산편성·지출 과정의 정합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정책 도구 개발의 필요성 인식

: 녹색예산의 합의된 정의와 방법론을 제시하고 각국의 노력 지원



③ EU 다년도 재정계획

- 유럽구조투자펀드(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ESIF)의 다년도 재정계획 추적 및 관찰을 위해 Rio Markers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목적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공통방법론(Common Methodology) 개발

표2 기후행동 수준에 따른 분류

범주	기준
100% climate marker	기후 행동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지출로 기후 행동이 지출 활동 설계와 영향에 핵심적인 요소
40% climate marker	기후 행동을 중요하게 다루지만 제1의 목적으로는 하지 않는 지출로, 활동에서 기후 행동이 중요하지만 핵심은 아님
0% climate marker	기후 행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출

④ 프랑스 녹색예산

- 프랑스는 2017년부터 녹색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방법론 개발
- : 2020년 1~3을 긍정에 포함, 중립, 부정으로 분류 → 2021년 부정적 영향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긍정부정 복합으로 분류
- : 2021년 총 5,742억유로의 예산 및 세금 지출 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과 세금지출은 9.2%인 528억유로

⑤ UNDP 기후예산태깅

- UNDP는 기후 관련 지출 정보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기후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후공공지출 및 제도 검토(CPEIR)와 기후예산태깅(CBT) 방법론을 개발하여 각국에 확산
- : CPEIR은 예산 편성 및 계획 프로세스에 기후변화를 주류화하는 도구로 2011년 네팔에서 처음 적용된 이후 19개 국가에서 활용
- : 기후예산태깅(Climate Budget Tagging)은 예산에 태그 또는 계정 코드와 같은 기후예산 마커를 표시하여 기후 관련 지출을 정기적으로 측정, 모니터링하는 도구

⑥ 오슬로시 기후예산제

- 오슬로시는 2016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거버넌스 톨로 기후예산제(Climate Budget)를 도입하여 2017년 예산부터 적용
- :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예산 과정을 통합하여 다음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실행 수단, 예상 감축량, 책임 부서를 명시하여 관리

프랑스 녹색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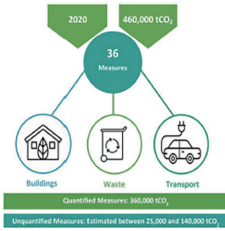
[프랑스 녹색예산의 6대 목표]



3(매우 긍정적)	2(긍정적)	1(긍정적이나 논란의 여지)	0(중립)	-1(부정적)
· 장기 환경적 목표 또는 환경제, 서비스 생산 · 지속가능한 녹색지출	· 환경적 목표 없음 · 환경에 긍정적 영향 · 간접적 녹색지출	· 단기 환경적 목표 그러나 기술적 검증과 우려 · '덜' 지속가능한 녹색지출	· 환경에 약영향을 미치지 않음 · 중립적 지출	· 직접적으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 또는 부정적 행동 유도 · 환경을 악화시키는 지출

오슬로시 기후예산제

[기후예산 방법론]



[오슬로시 기후예산]

No.	Measure and policy instruments	Effect 2020 in CO2e*	Effect 2030 in CO2e**	Responsibility
Estimates sector: Housing				
1	Phasing out of old fuel heating in buildings Subsidies from January 2020 Phasing out of old (inefficient) heat pump buildings	442,000	442,000	Government/MSB/BJL
Estimates sector: Public procurement and energy supply				
2	Phasing out of fuel oil and gas in public heating and power plants Subsidies for heat loss (over 42)	1,800	3,600	NKE
Estimates sector: Road transport				
3	Regulatory requirement for sale of 20% hybrid in 2020 Introduction of new road toll payment system Subsidies for electric charging Subsidies for public and regional public transport for private car-pooling Contribution of national policy to the development of electric vehicles Reimburse from payments for electric cars	1,000	1,000	Government/MSB/BJL

UNDP 기후예산태깅

[CPEIR 분석 체계]

분석 대상 권역/사업	분석 내용 지표/지표	분석 내용 기후공공지출
· 기후변화 취약성 및 빈곤 정도 평가 ·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접근가능성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 취약성 분석 · 취약성 평가 · 취약성 평가 · 취약성 평가	· 기후변화 취약성 · 기후변화 취약성 · 기후변화 취약성 · 기후변화 취약성 · 기후변화 취약성 · 기후변화 취약성	· 기후변화 취약성 · 기후변화 취약성 · 기후변화 취약성 · 기후변화 취약성 · 기후변화 취약성 · 기후변화 취약성

[기후공공지출 분석단계]



· 국내사례

-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2023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대덕구 등 약 4개의 지자체에서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거나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표3 국내사례

구분	명칭	범위	분류기준 및 정책 유형	비고
중앙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기후변화 완화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태깅 + 감축효과 산정 · 감축, 배출, 혼합, 중립 · 정책유형: 시설설치 및 건설, 제도 및 기반, R&D 및 조사·연구	· 기후대응기금 시범 적용 ('22년) · '23년 본격 적용
서울시	기후예산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기후변화 완화	· 기후예산태깅+감축효과(정성, 정량) 산정 · 감축, 배출, 혼합, 중립 · 정책유형: 물리적 인프라, 교육·홍보·시민참여, 정책·기술적 토대	· '22년 기후환경본부, 푸른 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본부·국에 시범적용 · '23년 전 기관 확대 · 부서 작성 → 위원회 검토

표3 의 계속

구분	명칭	범위	분류기준 및 정책 유형	비고
경기도	탄소인지 예산제	기후변화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인지예산태깅+온실가스감축 체크리스트 작성, 감축효과(정성, 정량) 산정, 모니터링 감축, 배출, 복합영향,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시범적용 → '22년 시범적용 대상 확대 → '23년 전면 확대 세출예산목 400 자본지출 보조사업에 대해 부서에서 체크리스트 작성 → 전문가 검토 → 부서 피드백 제공
경남	기후위기 영향평가	기후변화 완화, 적응, 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예산(녹색예산)태깅+기후 위기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서 및 연구진 작성 → 전문가 검토(제한적) 녹색예산 성격
대덕구	탄소인지 예산제	기후변화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인지예산태깅 감축, 배출, 혼합,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구매 강조

경기도 탄소인지예산 적용사례

• 경기도 탄소인지예산의 추진경과

- 경기도는 2020년 5월 탄소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을 논의하여, 11월 일부사업에 대해 시범운동을 실시하였고, 2021년 8월부터 2022년도 전체 예산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 경기도는 가장 먼저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준비한 지자체로서 예산의 시범운영과 체크리스트 작성 설명회, 공무원 교육, 전문가 검토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

• 경기도 탄소인지예산 시범사업 사례

- 경기도의 탄소인지예산 분류는 배출, 감축, 복합영향, 중립의 4개 분류로 나누고, 감축에는 직접감축과 간접감축으로 분류하고 있음

- 아울러 시범사업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 체크리스트 작성 매뉴얼을 제공하여, 분류 별로 요인을 점검하여 감축방법을 검토하여 감축량 자동 산정 방식을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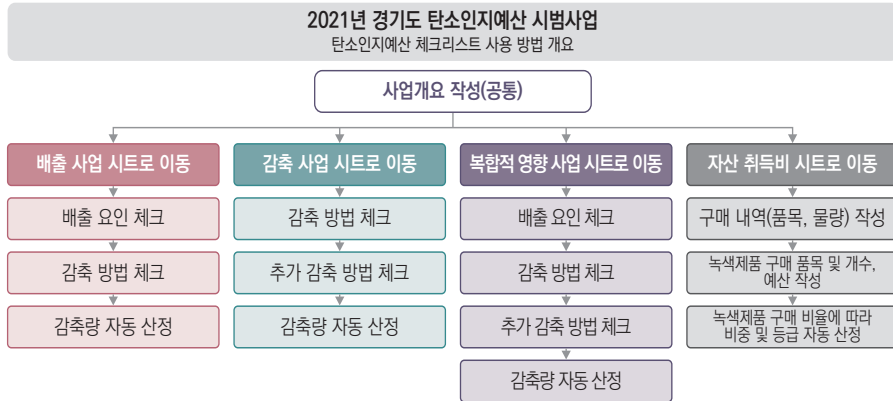


표4 국내사례경기도 탄소인지예산 시범사업 -사업분류

■ 배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석연료 사용 및 개발 행위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 감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감축: 온실가스 감축 또는 에너지 전환, 절감이 사업의 목표나 목적, 추진방향,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기후변화 관련 계획(2030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경기도 그린뉴딜 및 에너지전환 세부 실행계획 등)의 단위과제에 해당하는 사업 • 간접 감축: 온실가스 감축 또는 에너지 전환, 절감이 사업의 명시적인 목적, 목표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
■ 복합적 영향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이 모두 포함되어 영향이 복합적이거나 기술 적용과 사업 방향 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 영향이 있는 사업
■ 중립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 또는 감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관련 정보가 부재한 사업

탄소인지예산제의 쟁점과 이슈

- 방법론적 쟁점과 이슈
 - 온실가스 감축 관련 예산 지출 평가 기준 및 가중치 적용 여부
 - :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온실가스감축 관련 요소나 활동이 포함된 사업 그리고 두 가지 모두가 결합된 사업이 존재하며, 어디까지를 포괄범위로 설정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 다만 감축 목적의 지출만을 포함할 경우 과소평가의 우려 존재하며, 가중치 적용의 경우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 요구됨
 - 탄소인지예산 분류를 위한 예산의 유형화

: 기후변화 관련 예산을 유형화하여 분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예산 유형을 통일시켜 적용하되 예외적인 예산을 별도로 분류하는 방안 검토

- 탄소인지예산 효과 산정 기준

: 탄소인지예산은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기존 방식으로 집행할 경우를 베이스라인으로 탄소인지예산을 적용했을 때(감축안 등)와 비교하여 감축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 태깅 예산의 범위

: 온실가스 목표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예산을 모두 포함해야 정책의 상충성 방지 및 효과성 제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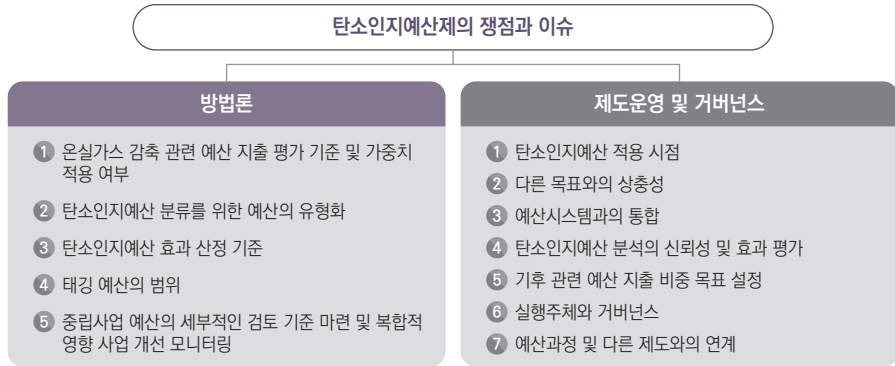
: 일반경비 또한 분석 대상으로 포함 가능(환경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여비 등)

: 화석연료 보조금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감면 등 조세지출을 대상에 포함 필요

: 중앙정부 예산뿐 아니라 지방정부(광역, 기초), 공공기업 예산도 포함 필요

- 중립사업 예산의 세부적인 검토 기준 마련 및 복합적 영향 사업 개선 모니터링

: 감축, 중립, 배출사업이면서 중장기적으로 배출, 감축의 복합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변화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



• 제도운영 및 거버넌스 측면의 쟁점과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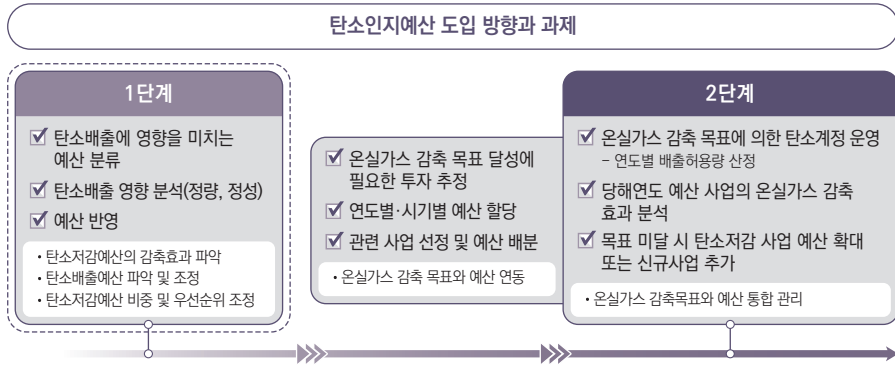
- 탄소인지예산 적용 시점

: 예산 확정 전후 및 모두 적용 여부에 따라 의도와 실행 결과 두 측면에서 장단점이 존재하며, 모두 적용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전, 사후 보고 가능함

- 다른 목표와의 상충성
 - : 기후변화 적응이나 다른 환경보호 목표와 상충되는 사업에 대한 고려 필요
- 예산시스템과의 통합
 - : 재정관리 시스템에 기후변화 예산 분류를 위한 태그를 포함하면 기관들이 예산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기후 관련 코드도 함께 입력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 모니터링도 가능하나 일부 국가에서만 추진하고 있음
- 탄소인지예산 분석의 신뢰성 및 효과 평가
 - : 탄소인지예산 분류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며, 검토와 검증 프로세스가 있어야 그린위상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데이터의 견고성 보장
- 기후관련 예산 지출 비중 목표 설정
 - : EU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 달성을 위해 다년도재정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에 기후변화 지출 예산 비중을 지정하고 2021~2027년 장기 재정계획(MFF) 중 기후예산을 30%로 상향
- 실행주체와 거버넌스
 - : 행정부서와 공무원 및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됨
- 예산과정 및 다른 제도와의 연계
 - : 탄소세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등 경제적 인센티브 및 규제 수단의 녹색개혁과 함께 추진되어야 효과적

탄소인지예산제 도입방향

- 탄소인지예산의 도입방향과 과제
 -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목적, 제도 운영 역량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 중요
 - :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편익을 가시화하는 것이 중요
 - : 적용을 위한 방법론 개발에 많은 자원 투입 필요, 시범 적용을 통해 시행착오 최소화, 예산 부서 및 온실가스 감축 주관 부서 간 긴밀한 협력 및 논의 중요



- 탄소인지예산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투자

- : 탄소인지예산 편성 지침과 가이드라인 개발
- : 탄소인지예산 대상 회계 및 사업 유형별 탄소배출 영향 분석 방법과 툴 개발(직접/간접, 정량/정성 등)
- :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
- : 전문가 및 컨설턴트 역량 강화
- : 통계, 조사연구를 통한 인프라 구축,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효과 평가 기준 마련 (BAU 대비, 의무화 등)
- : 전담기관 지정 등

다. 주요 토론내용

허경선

- 아시아 국가의 태깅 관련하여 국제기구(world bank)의 진행사항 조사 중
- 아시아 국가의 경우 해외자원 유치 위해 수자원 관리와 같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
- 프랑스 녹색예산의 경우 준비기간도 길고 예산의 포괄범위도 넓지만, 감축량의 실질적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는 긍정과 부정의 단계를 나누는 방향으로 진행 중

-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5월 「국가회계법」 개정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2022년 시범사업을 통해 2023년에는 예산을 비롯하여 결산까지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시점까지 모든 것을 수행하기에는 짧은 준비 기간이므로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짧은 준비기간에 많은 것을 수행하려고 하면, 명확하게 녹색예산을 분류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채우기 위해 관련 없는 예산마저 녹색화 사업으로 포함하는 그린워싱 현상이 우려되므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함
- 첫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예산을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조영탁

- 대전 대덕구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최초로 도입을 진행하는 곳으로서 내년 500개 정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 결산서 작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법적 제도에 따라 과제목적 및 방법론은 일부 수정 요구됨
- 다만 제도 도입 후 부서 담당자들의 인지 정도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기 전 대덕구 전체 담당자들에게 교육과 인지에 대한 부문 교육을 실시 하였고, 효과가 기대됨
- 대덕구의 탄소인지예산의 분류는 감축, 배출, 혼합, 중립의 4개 분류기준에 의거하고 있음
- 분류 기준이 아직까지도 모호한 점이 있으나 최대한 심플하게 구분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로드맵 구축
- 중립은 우선 제외하고 나머지 분류에 대해서 시범사업 추진할 계획
- 온실가스 감축 원단위는 한국환경공단 제공 표준화된 원단위 사용하여 엑셀 툴 구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사업은 적은 비중으로 나타남
- 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이행 평가 시 탄소인지예산제도와와의 연계성이 중요하며, 국가와 지자체 간의 조율도 중요한 과제임
- 지자체 입장에서 감축할 수 있는 사업, 즉 정량화된 사업은 한계가 있음
-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 내에 산업부문에서 감축량이 많으나, 지자체의 사업은 주로 비관리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자체 내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

- 분이 존재하므로 중앙정부에 관리권한 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 중임
- 과거부터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었음. 이러한 감축 사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외적인 부문, 즉 예산 설계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현재 탄소 인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부분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나 우선적으로 도입 연구해야 될 부분은 추진하되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임
- 향후 국가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기초지자체 여건과 상이한 점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여 탄소중립 실현 이행 기반 체계의 한 축이 되어야 함
- 배출, 혼합, 중립 사업의 감축사업으로의 완전한 전환체계 방법론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 및 검토되어야 함

김원희

- 탄소인지예산제도의 수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저감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Baseline)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탄소인지예산의 저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방식으로 집행했을 때와 탄소인지예산을 적용했을 때의 저감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요구되고, 이는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성인지 예산제도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비교해 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특정목적에 부합하게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는 예산은 동일하나, 성인지예산의 경우 그 효과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탄소인지예산과 비교분석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성 있음

라. 질의 응답

질의 내용

문창오

- 대덕구의 탄소인지예산을 분류하셨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나?

이정미

- 지자체의 탄소인지예산제가 제각각 진행되고 있는데, 일관성을 갖춘 기준이 먼저 요구되는지? 아니면 지자체 각자의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지자체를 벤치마크하는 형태가 좋을지?
- 국가단위의 탄소인지예산제도의 단계적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내용

고재경

- 탄소인지예산의 기준과 관련하여 기존방식 대비 적용 시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발사업 시행 시 탄소의 절대 배출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적용 전을 기준으로 삼을 배출량 기준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감축량에 방점을 찍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온실가스 감축 원단위가 없는 사업에 대한 정성적 평가 방법(비율, 등급 등) 마련도 필요
- 탄소인지예산은 성인지 예산과 달리 객관적인 증거와 방법론을 기반으로 정량화된 수치로 표현하고 측정·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 예산과는 차별화
- 지자체 단위의 탄소인지예산 도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자의 방식에 따라 진행하면서 제대로 수행되는 방식으로 통일 및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허경선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을 분류할 때 단계적인 진행이 요구됨
- : 우선 공정한 전환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약 2.5조원)과 탄소인지예산으로 책정된 금액(11.9조원)에 대해 태깅과 저감사업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 이후 전체 국가예산에 적용하고, 현재 포괄범위에서 빠져 있는 조세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됨
- : 온실가스 배출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은 주로 조세지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정교화한 후에 예산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

조영탁

- 대덕구 탄소인지예산 분류는 배출, 감축, 혼합, 중립등 네 가지 기준을 사용했는데, 약 5% 정도만이 배출, 감축, 혼합에 속했으며, 대부분이 중립예산으로 분류되었음
- : 중립분류 중 감축 전환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분류해볼 예정임
- 현재 지자체 예산만을 검토했는데도 구체적으로 양적 기준을 찾기 어렵고 모호한 지점들이 존재하므로 추후 좀더 정교한 지침과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대덕구의 예산 규모는 작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물품구매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여 간접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친화적인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공지사항



국가회계재정통계 구독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는 회계전문연구기관인 센터에서 발간하는 분기발간물로서 주요 내용으로 국가회계, 국가결산, 국가회계교육, 재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대한 동향 및 분석 자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http://gafsc.kipf.re.kr>
- 이메일 신청 gafsc@kipf.re.kr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신 발간자료와 주요 발간자료 메뉴를 통해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브리프, 세미나자료 등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발간물 등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